
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

“경제에 **활력**을, 국민에 **온기**를”

2020. 2. 19.



금 융 위 원 회

||| 목 차 |||

I . 그동안의 금융정책 평가	1
II . 2020년 금융정책 추진여건	7
<참고> 주요 금융정책 對국민 서베이 결과	9
III . 2020년 금융정책 방향	12
1. <제1목표>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	13
[과제①]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혁신	14
[과제②] 자본시장 혁신	22
[과제③] 금융산업 혁신	30
2. <제2목표>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	37
[과제④] 서민금융 안전망 획기적 개선	38
[과제⑤]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	42
[과제⑥]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강화	47
3. <제3목표>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금융	52
[과제⑦] 금융리스크에 대한 체계적·선제적 대응	53
[과제⑧] 금융부문의 공정성·책임성 강화	58

I. 그동안의 금융정책 평가

1

금융정책 추진성과

가. 금융안정 유지 및 잠재 위험요인 관리

◆ 가계부채, 기업부실 등 잠재 위험요인 관리 노력을 지속하면서 상시점검·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고한 금융안정 유지

1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주택시장 안정 유도

① 증가속도 관리, 소금융권 DSR 도입 등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

* 가계부채 증가율(전년동기비, %) : ('16년말)11.6 ('17년말)8.1 ('18년말)5.9 ('19.3Q)3.9

②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사업자대출, 고가주택 담보대출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대출규제 강화('19.10월, 12월)

2 상시적·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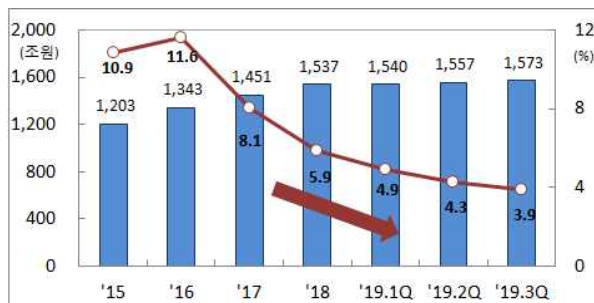
○ 부실채권(NPL) 시장의 민간중심으로 전환,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(1.6조원) 등 자본시장 주도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

3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상시 점검 및 대응체계 강화

○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, 잠재 시스템 리스크 요인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강화* 추진

* RP시장, 채권대차, 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방안 마련

< 가계부채 증가율(전년동기대비, %) >



< 자본시장 주도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>

시장형성 선도	회생기업 지원
①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 (최대 5조원)	③ DIP 금융 활성화 (직·간접지원 연 2,300억원)
② 유암코(2천억원) 및 캡코 (年 2천억원) 투자 확대	④ S&LB 등 통한 실질적 지원 강화(연 2,000억원)

나. 혁신금융 인프라 구축

◆ 기업 여신심사 추진, 모험자본 확대, 정책금융 공급 추진 결과, 기술력·미래성장성을 지닌 중소·벤처기업에 보다 많은 자금 공급

1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, 인프라 구축

- ①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개선(新 예대출 도입) 등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이 747조원을 상회
- ②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 추진, 동산금융 공동DB 구축('19.8월) 등 담보관행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

* 동산담보대출 잔액 : ('18년말) 0.8조원 → ('19년말) 1.6조원

2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등 자본시장 구조혁신을 추진

- ① 성장지원펀드를 조성(3년간 8조원)하고 대형증권사의 중소·벤처기업 등 대상 모험자본 공급 확대('13말 0.07조원→'19.3말 1조원)
- ②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에 '혁신성'을 강화^①하고, 상장절차도 간소화^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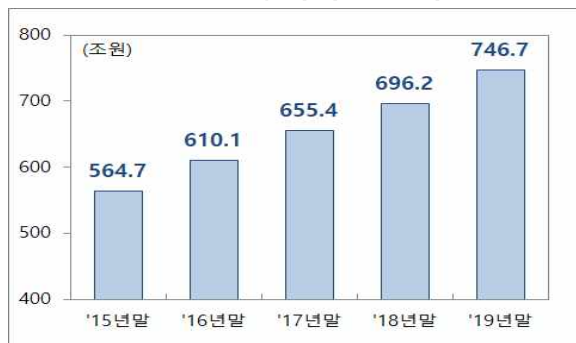
① 주력 기술 및 사업의 독창성·확장성, 사업화·R&D 역량 등을 심사지표로 활용

② 외부 기술평가 등급이 우수한 경우 거래소 기술성 심사 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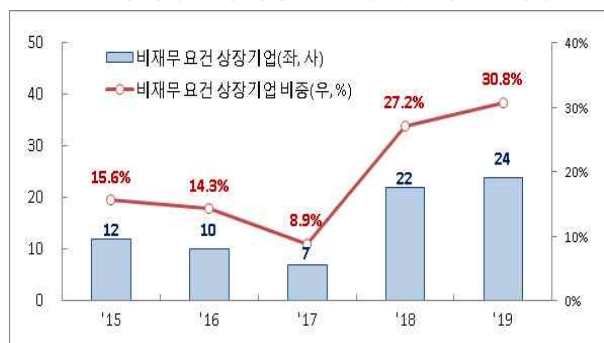
3 정책금융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사업재편을 지원

- 중소·중견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자금 ('19.11월 기준 5.2조원) 등을 지원

< 은행권 중기대출 잔액 >



< 코스닥시장 비재무요건상장 기업 비중 >



다.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

◆ 금융권 전반에 경쟁을 촉진하고, 핀테크·빅데이터 등 금융 분야 新산업의 활성화 유도

1 금융산업 진입장벽을 낮추어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유도

- ① 혁신 ICT기업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('18.10월)하고,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(예비인가, 1개사)
- ② 6년 만에 보험사를 신규허가(1개사, 온라인특화)하였으며, 10년간 신규인가가 없었던 부동산 신탁사도 신규인가(3개사)

2 핀테크 산업발전·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구축

- ① 혁신적인 新금융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「금융혁신 지원 특별법」 시행('19.4월)
- ②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방식을 도입하는 P2P금융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」 제정('19.10월)
- ③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기반 마련(「신용정보법」 개정안, '20.1월 국회 통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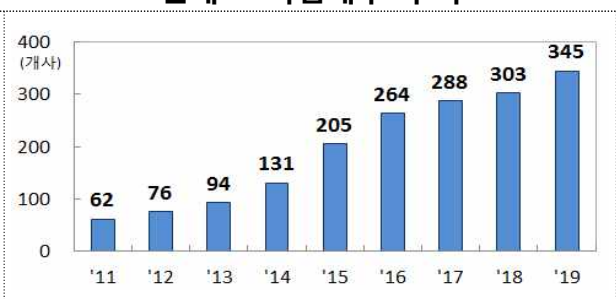
3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마련

-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('19.4월~)하면서 현재까지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등 혁신적 시도를 뒷받침
- ② 오픈뱅킹 출범('19.12월~),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('19.6월~) 등을 통해 금융분야 新산업 활성화 지원

<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결과 >



< 핀테크 기업체수 추이 >



라.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

◆ 서민금융 지원,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취약 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고 포용금융을 확대

1 이자·수수료 등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

① 법정 최고금리 인하^①(27.9%→24%), 서민형 안심전환대출^②을 통해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

① 최대 293만명 차주의 이자부담 1.1조원 경감 추정

② 약 27만명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(연간 2천억원, 1인당 75만원)

② 우대가맹점 확대 등으로 카드수수료 부담(1.4조원 추정) 완화*

*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비중(%) : (17.1월) 77 → (17.7월) 84 → (19.1월) 96

2 서민·취약차주의 금융애로에 대응하여 금융지원 강화

①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*, 햇살론¹⁷ 신규 공급, 중금리 대출 강화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지속 경감

* 서민금융 공급액 ('08년 이후 누계) : ('15)22.2조원 → ('19년)49.2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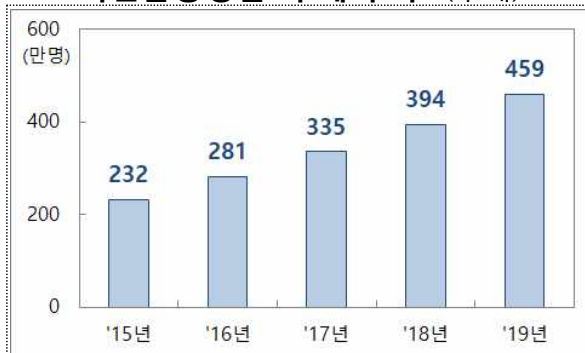
②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*, 채무조정 지원체계 개편 등을 통해 연체 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지원

* '17.7월 ~ '19.12월까지 총 40조원(394만건)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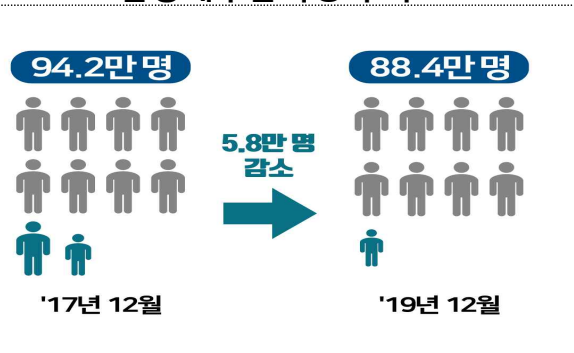
3 금융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추진

* 고령층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, 내보험 찾아줌 등

<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수 (누계) >



<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>



◆ **[혁신금융]** 그간의 혁신금융 추진 결과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, 금융중개 전반에 걸쳐 혁신금융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할 필요

-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위주 영업, 담보·보증 의존 관행이 여전히 하며 기업심사역량 제고 노력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
 -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량 중소기업이나 담보·보증이 충분한 기업에 치중하는 사례가 여전히 곳곳에 잔존
- 일부 모험자본은 장기 투자, 벤처·혁신 투자 등 본연의 역할 보다는 부동산, 파생상품 투자 등 고수익 추구에 집중

▶ (벤처기업) “미래사업성 평가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, 은행 창구에서는 여전히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등 보수적인 여신심사 관행이 지속”

➡ 미래성장성 중심의 기업여신체계 확립, 모험자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혁신금융 강화 필요

◆ **[금융부문 혁신]** 진입규제 완화, 혁신서비스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으나, 금융산업 전반으로 변화를 확산시킬 필요

- 그동안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고 있으나, 공급자 위주의 산업구조하에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영업행태가 여전하다는 평가
- ➡ 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혜택 확대, 혁신적인 서비스 공급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진입규제 개선, 경쟁·혁신 유도 필요
- 핀테크 법제 마련,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였으나,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혁신주도형 금융제도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
- ➡ 핀테크 경쟁력 제고,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규제 유연화, 지원방안 마련 등이 요구

◆ **[포용금융]** 서민금융 지원성과 확대,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등의 진전이 있으나, 금융 포용성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

-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하며,
 - 채무조정 관련 금융제도·관행이 채무자의 재기지원보다는 채권자의 채권회수 극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
-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, 고령층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

- ▶ (금융소비자) "파생결합증권 등 복잡한 상품이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상품 설명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음"
- ▶ (고령층 이용자) "금융상품 이용이 전반적으로 온라인화·자동화되면서, 인터넷, 스마트폰 등에 익숙치 않은 경우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음"

➡ 취약계층 지원,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 제도, 관행, 재원조달, 교육 전반에 걸쳐 포용성 지속 강화 필요

◆ **[시장안정]** 대내외 불안요인이 실물·금융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,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

- 美-中 무역분쟁,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 요인으로 실물·금융부문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 상존
- 가계부채, 기업부문 리스크 등 알려진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,
 - 펀드 유동성리스크, 부동산PF 익스포저 쏠림, 금융 디지털화에 따른 사이버리스크 등 신규 위험요인도 부상
- ➡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인한 실물·금융부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해 철저한 관리 등 대응 필요

Ⅱ. 2020년 금융정책 추진여건

1

금융시장 여건

◆ 향후에도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전망

- 美 - 中 무역협상 1단계 합의, 글로벌 경기 회복, 중동 불안 완화 등은 글로벌 및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전망
 - 다만, 새로운 리스크 등장 등에 따라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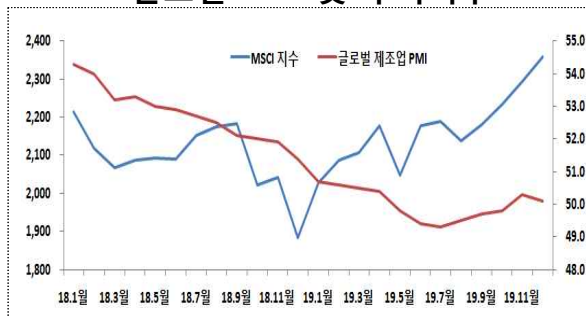
< 참고 : 글로벌 시장불안요인 >

- ① (코로나19) 코로나19가 전세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, 사태 안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시장변동성 확대요인
- ② (美 - 中 무역분쟁)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하였으나, 2단계 협상 과정에서 지재권, 환율 문제 등 복잡한 이해관계로 양국간 갈등이 불거질 여지
- ③ (Brexit) EU - 영국 간 FTA 협상 등이 전환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
- ④ (미국 대선) 대선 결과 및 향후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
- ⑤ (지정학적 리스크) 최근 중동 불안을 비롯하여 홍콩 시위, 중남미 정치·경제 불안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신흥국 중심으로 변동성이 발생할 여지

◆ 저금리·저성장·저물가 지속에 따른 시장모니터링 강화 필요

- 고위험 자산으로의 쏠림현상,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필요

< 글로벌 PMI 및 주가지수 >



< 글로벌 CLO 투자 현황 >



◆ 내부유보 증가, 직접자본시장 활성화 등으로 자금조달 다양화

- '97년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추진, 무리한 사업확장 지양 등으로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*되고, 사내유보금도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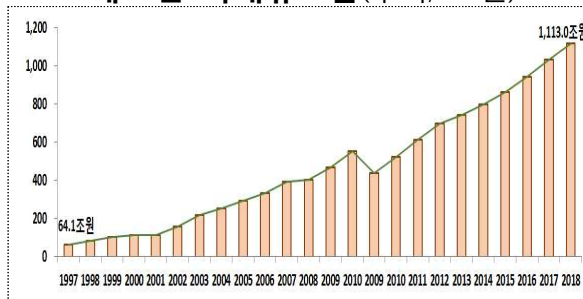
* 제조업 부채 비율 : ('97년) 396% → ('18년) 74%

** 제조업 사내유보금 : ('97년) 64조원 → ('18년) 1,113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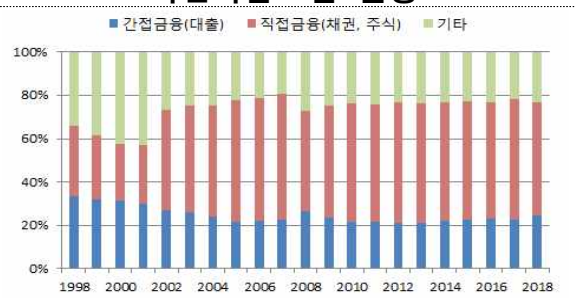
-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비중*이 크게 증가하는 등 차관·은행 대출에 의존하던 기업자금조달 구조가 변화

* 자본시장(직접금융)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 : ('98년) 32.5% → ('18년) 52.2%

< 제조업 사내유보금(누적, 조원) >



< 기업자금조달 현황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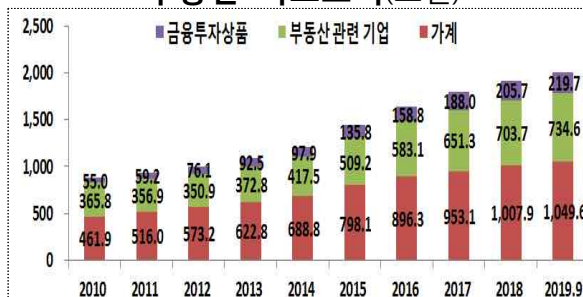
◆ 부동산 시장 쏠림, 담보 중심의 기업대출 등은 개선 필요

- 시중자금의 부동산시장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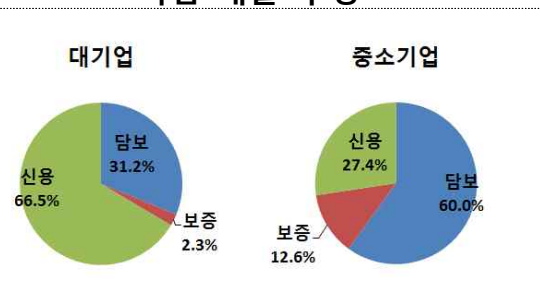
* 부동산 익스포저 : ('10년) 882.7조원 → ('19.9월) 2,003.9조원

- 기업대출의 경우 담보·보증 의존도가 높으며,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의존도가 높은 것도 한계

< 부동산 익스포저(조원) >



< 기업 대출 구성 >



◇ '20년 금융정책 방향설정을 위해 일반 국민(510명) 및 전문가(210명)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(갤럽, '20.1월)

1. 혁신금융에 대한 인식 (일반 국민, 전문가 대상)

□ (인지도) 정부의 혁신금융 과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는 전문가에 비해 크게 낮은 편*

* 혁신금융과제 10개 중 4개 이상 인지 : 일반인 30.4% < 전문가 92.9%

< 설문 대상 혁신금융과제 10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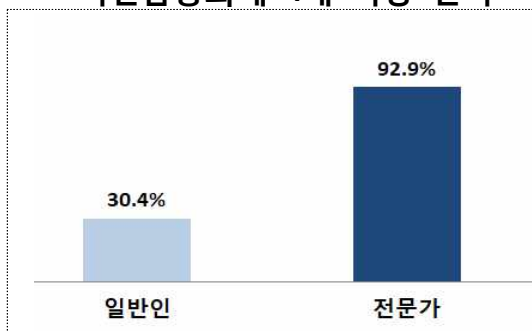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■ 동산금융·일괄담보제도 | ■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|
| ■ 신예대출 등 자본규제 개편 | ■ 성장지원펀드 |
| ■ 기술금융 | ■ 코스닥시장 상장활성화 |
| ■ 금융부문 규제샌드박스 | ■ 오픈뱅킹 |
| ■ 빅데이터 | ■ 인터넷전문은행 |

□ (혁신금융 노력 및 변화) 일반 국민은 전문가에 비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노력 및 금융회사의 변화에 대해 낮게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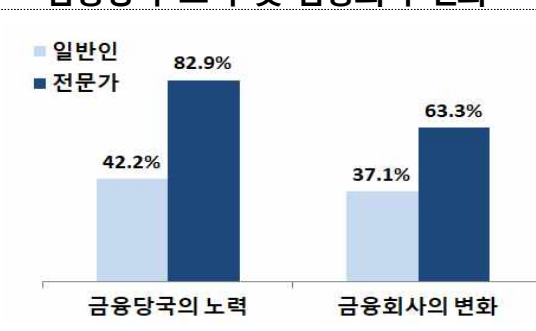
*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위해 (매우) 노력중 : 일반인 42.2% < 전문가 82.9%
금융회사가 혁신금융에 따라 (매우) 변화중 : 일반인 37.1% < 전문가 63.3%

○ 일반 국민, 전문가 모두 당국의 제도·인프라 개선 노력에 비해 일선 현장에서 금융회사의 변화가 부족하다고 인식

< 혁신금융과제 4개 이상 인지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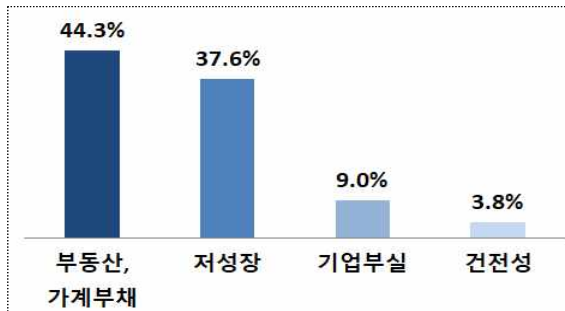
< 금융당국 노력 및 금융회사 변화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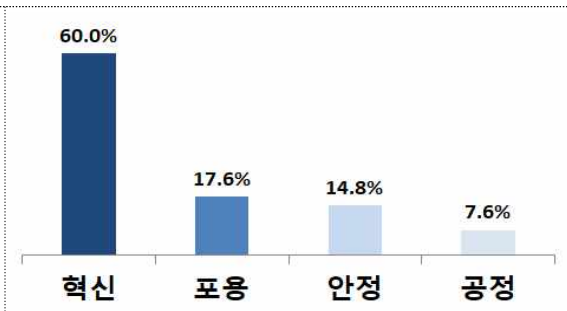
2. 2020년 중점 목표 및 추진과제 (전문가 대상)

- (추진여건) '20년 국내 금융시장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동산 자금줄림·가계부채(44.3%), 저성장(37.6%) 등을 지적
- (중점목표) '20년 중점 금융정책 방향으로 혁신금융(60.0%), 포용금융(17.6%), 금융안정(14.8%), 공정성(7.6%) 순으로 응답

< '20년 국내 금융시장 위험요인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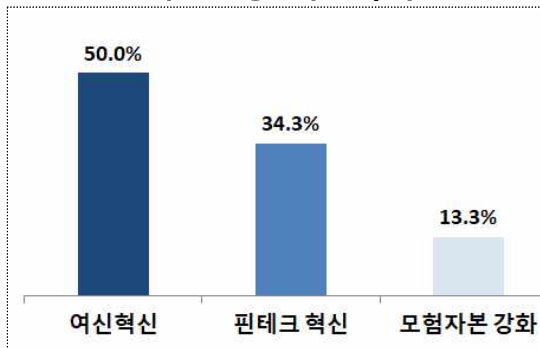


< '20년 중점 금융정책 방향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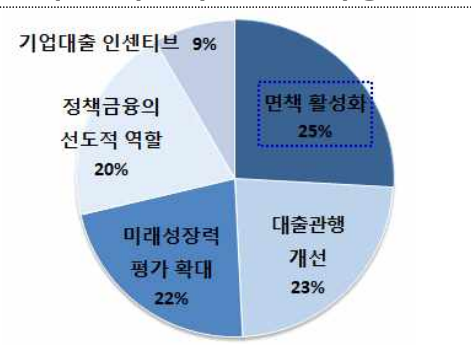


- (목표별 핵심과제) 중점목표별로 기업 여신혁신(혁신), 서민 지원(포용), 가계부채 관리(안정)가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
- (혁신금융) 핵심과제로 기업 여신혁신(50.0%) → 핀테크 혁신(34.3%) → 모험자본 활성화(13.3%) 순으로 제시
- '기업 여신혁신' 과제에서는 금융회사 면책 활성화(25%), 대출관행 개선(23%)을 주요 보완사항으로 지적

< 혁신금융 핵심과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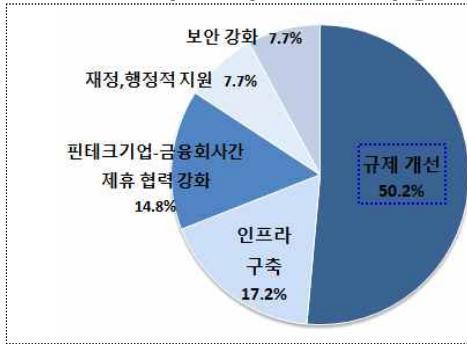


< 기업 여신혁신 보완사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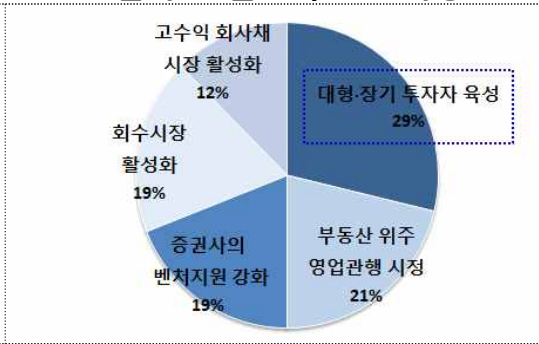


- '핀테크 혁신'에서는 규제 개선(51%), '모험자본 활성화'는 대형·장기투자자 육성(29%)을 가장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

< 핀테크 혁신 보완사항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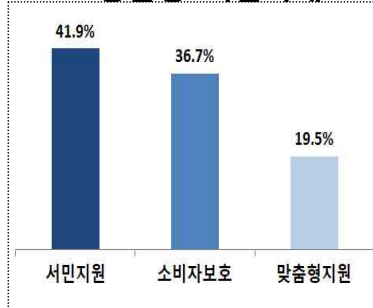
< 모험자본 활성화 보완사항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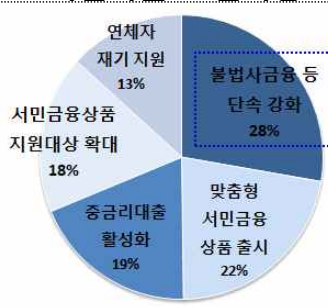
- **(포용금융)** 핵심과제로 서민 지원·취약계층 보호(41.9%) → 금융소비자 보호(36.7%) → 계층별 맞춤형 지원(19.5%) 제시

- '서민 지원'은 불법사금융 등 단속 강화(28%), '금융소비자 보호'는 상품설명서 개선(25%)에 대한 보완이 가장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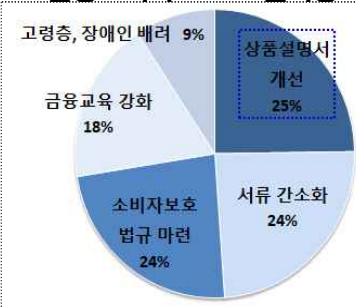
< 포용금융 핵심과제 >



< 서민지원 보완사항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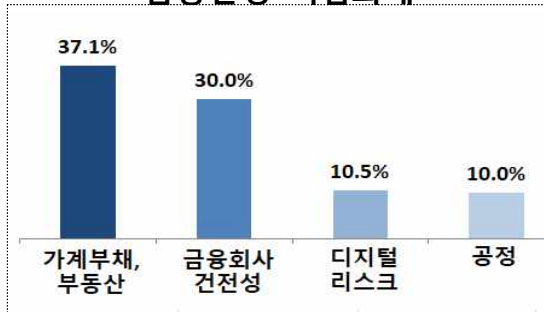
< 금융소비자보호 보완사항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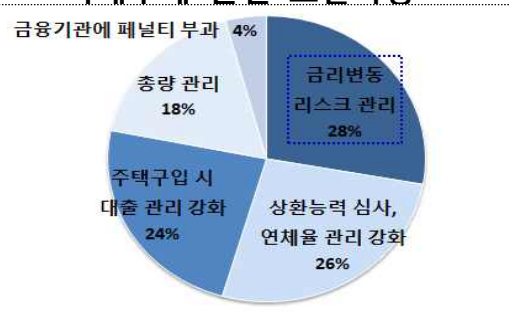
- **(금융안정)** 핵심과제로 가계부채 관리(37.1%) →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(30.0%) → 디지털 리스크 관리(10.5%)를 제시

- '가계부채·부동산 금융 관리'에서는 금리변동 리스크 관리(28%)를 가장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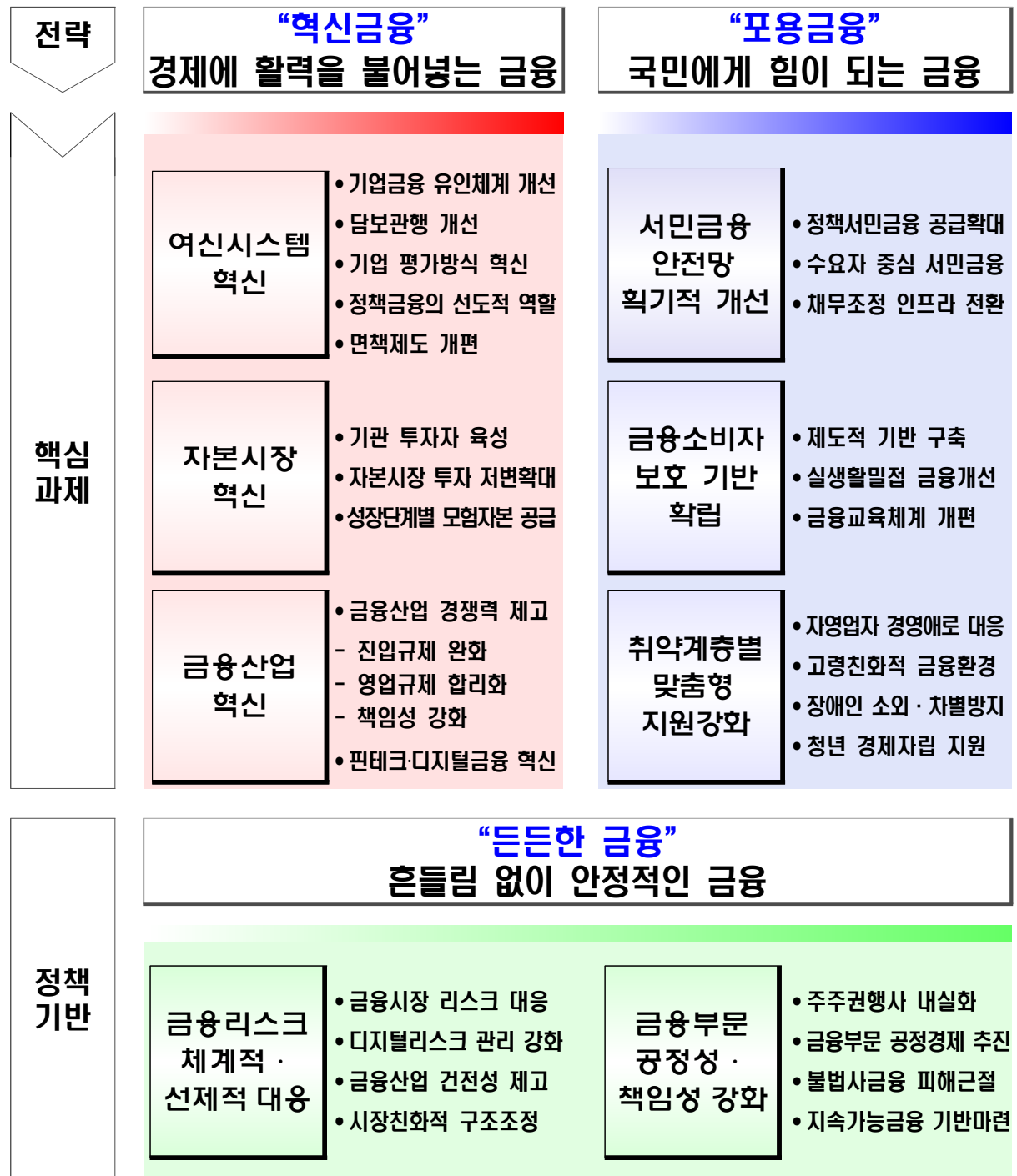
< 금융안정 핵심과제 >



< 가계부채 관련 보완사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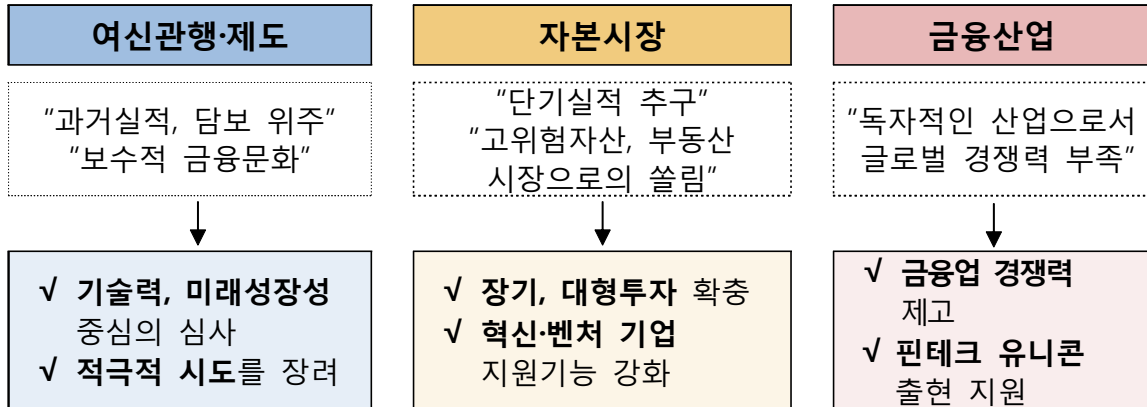


Ⅲ. 2020년 금융정책 방향



“경제에 활력을, 국민에 온기를”

< 정책목표 및 과제 개요 >



■ [제①과제]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혁신

- 가. 기업금융 유인체계 개선
- 나. 담보관행 개선
- 다. 기업 평가방식 혁신
- 라.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수행
- 마. 면책제도 개편

■ [제②과제] 자본시장 혁신

- 가. 기관 투자자 육성
- 나. 자본시장 투자 저변확대
- 다.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 정비

■ [제③과제] 금융산업 혁신

- 가.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
- 나. 핀테크·디지털금융 혁신

제1과제

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혁신



가. 기업금융 유인체계 개선

◆ 가계·부동산으로 치우친 시중자금흐름이 기업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설계

① 가계·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

-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, LTV규제 강화 등 既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*의 조치사항을 일괄되게 시행

*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('19.10월),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('19.12월)

- 부동산PF로의 자금쏠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, 건전성 관리를 강화

②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은행 자본규제를 개선

-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新예대출 시행('20.1월~)

* 대출 가중치 : (가계대출) 115%, (개인사업자대출) 100%, (법인대출) 85%

-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*을 도입('20.1분기)

* S-CCyB(Sectoral Counter Cyclical Buffer) :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분에 대한 은행 자산에 일정비율의 추가자본(보통주) 적립 의무를 부과

-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자본규제 준수부담을 경감

*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 하향(100%→85%) 등

나. 담보관행 개선

◆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하여 동산담보대출 활성화, 더 나아가 일괄담보제도를 도입·정착

1 동산·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

- ① (회수지원기구) 캠프 등이 금융회사의 부실화된 동산·지식 재산(IP)담보 대출의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 설립('20.3월~)
- ② (공동DB) 동산담보 유형별 평가·회수액, 권리·이력정보 등을 집중·제공하는 금융권 공동 DB 내실화(신청원, '19.8월~)
- ③ (표준기준) 은행권의 통일된 IP 담보대출 취급기준·절차를 반영한 IP담보대출 표준기준을 마련(특허청 협업과제, '20.3월~)

2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·펀드 마련

- ① (IP담보대출) 은행과 신보가 연계하여 IP담보+보증 결합상품*을 운영('20.1월~)하고, IP담보대출 상품을 확대**('20년중)

* 신보가 IP담보 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추가 보증을 공급

** IP담보·보증대출 취급 지방은행 : ('19) 2개 은행 → ('20) 5개 은행

- ② (IP펀드) '22년까지 5,000억(누계)의 IP 펀드를 조성(모태펀드+성장 금융 공동출자)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기반 조성

3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

(「동산담보법」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제출)

< 일괄담보제도 도입 >



<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>



다. 기업 평가방식 혁신

◆ 매출액보다는 기술력, 미래성장성으로 대출·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을 전면혁신

① 기술력, 미래성장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심사기법, 신상품 도입

① (대출) 신산업 부문 기업의 기술력·성장성 등을 위주로, 전담 심사조직을 통해 심사하는 새로운 심사체계 운영(20.下)

※ 참고 : 신산업 심사체계(산은) 주요 내용

- (대상) 「신성장 공동기준」에 따른 4차 산업혁명 품목 취급 기업
- (심사방식) ①기업의 혁신성·비교우위 가치위주로 기술경쟁력 판단
②성장잠재력, 산업·시장파급력 중심으로 회수가능성 판단
- (심사 프로세스) 신산업 전담 심사조직(위원회 의사결정) 운영

② (보증) 기업의 혁신성(R&D, 기술력 등), 사회적 기여도(고용 등) 등이 반영된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 본격 도입(신보, '20.9월)

* [현행] 재무지표 위주 평가, 미래성장성은 일부기업에 보조지표로 활용
→ [개선] 재무제표가 미비한 창업기업 등 모든 기업에 대해 미래성장성 기반 보증심사등급 산출

③ (신상품) 자영업자의 매출액·고객 수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대출 프로그램('SOHO 신용대출') 출시(기은, '20.上)

* 카드매출, 고객방문정보 등 활용하여 연 5.0~9.5% 금리 신용대출 지원

②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비중을 확대("기술-신용 통합모형")

① 보조적 지표로만 활용되는 기술평가의 반영도를 높여 기술력과 신용도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·한도 결정(20.下)

* [현행] 기술평가는 대출가능 여부에 영향 X, 금리인하 요인 등으로만 반영
→[개선] 기술평가가 기업의 대출가능 여부·한도 산정·금리결정 등 영향

②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방안*도 함께 추진

*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개선 : 평가방식·절차 등을 표준화

** 기술력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지표를 표준화·정교화(정량 지표 확대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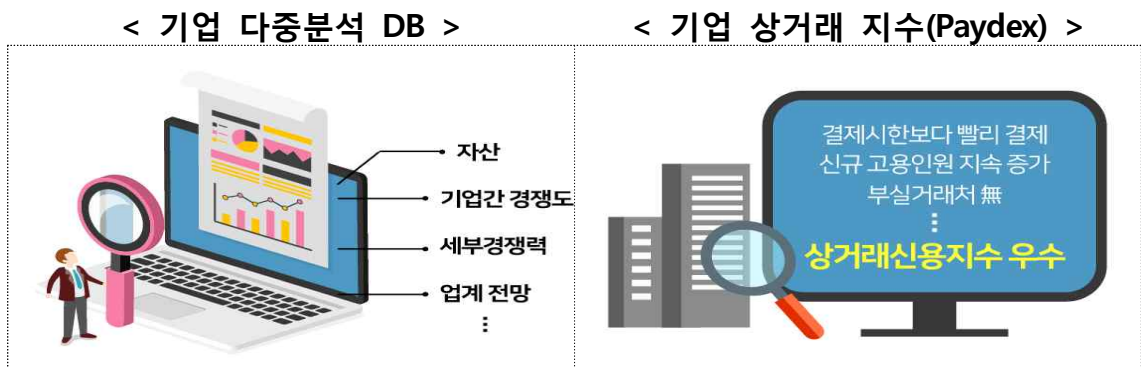


③ 기업의 영업력, 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

① (기업 다중분석 DB) 산업전망, 기업 경쟁도 등 기업분석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(신청원, '20.6월)

② (상거래신용지수) 재무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결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하도록 지수 마련

- 보증과정에서 파악한 지급결제 신용도 등 상거래 정보를 지수화(“한국형 Paydex”)
- 상거래신용지수가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동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보증상품 등을 출시
- 동 지수를 민간 CB에 제공하여 신용평가모형과 접목하거나, 별도 지수를 개발하는 등 CB의 혁신기업 평가역량 강화도 지원



라.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수행 1) 혁신성장 지원

◆ 민간 투자자금 등이 혁신성장 부문에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“마중물” 기능 강화

1] 관계부처(산업부, 중기부 등)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을 선정(국가대표 1,000)하여 자금수요별로 종합적·적극적으로 금융지원(3년간 40조원)

- ① (대상) 관계 부처(산업부, 중기부 등) 추천 등을 통해 1,000개(+a)의 혁신기업을 선정
- ② (금융지원) 3년간 최대 40조원(투자 15조원 + 대출 15조원 + 보증 10조원)을 업종별(벤처/유망산업/핀테크 등) 맞춤형으로 자금지원
- ③ (투자유치)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(3년간 30개)에 대해서는 국내외 VC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을 지원

< 국가대표 혁신기업 1,000개 자금지원 >



2]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발굴·확산

① (공동보증) 제조업-부품업체 등 협력관계에 있는 복수기업群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괄심사·지원(신보, '20.上)

* (예) 대기업 출연금을 재원으로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群에 보증을 제공하여 대-중소기업 공동프로젝트, R&D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
② (無 상환청구권 팩토링) 중소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조기,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구매기업의 부도위험을 신보가 부담하는 팩토링 제도 도입(신보, '20.下)

* 연간 5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시범운용 후 성과에 따라 단계적 확대



- ③ 혁신·벤처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증공급 체계 효율화를 추진

❶ (혁신금융 기능강화) 산은의 혁신금융 선도 기능 강화

: [현재]구조조정 · 주력산업 지원 위주 → [개선]신산업 · 혁신금융 위주

- (벤처지원) 유니콘 육성 공동협의체(MEGA7*) 운영('20년 연중), 투자플랫폼(NextRound) 강화**('20년 연중) 등 벤처지원 기능 강화

* 국내 상위 7개 VC + 산은 협력을 통해 예비 유니콘기업 등 공동 투자

** 핀테크 · 비수도권 등 산업 · 분야별 Round 확대, 온라인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

- (정책금융 조정) 「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*」, 「해외 M&A 투자 공동지원 협의체**」 운영 등 조정 · 협력 기능도 강화

* 지원대상 기업정보 등 기관간 공유, 정책금융 지원성과 분석 등

** 산업계(대한상의 등), 금융계(산 · 기 · 수은 등) 공동으로 해외 M&A 등 금융지원

❷ (보증공급 효율화) 창업 혁신부문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*를 위해 보증공급 체계 효율화 지속추진(신보)

*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 등을 선정(매년 10여개)하여 보증한도 상향 등 지원 (예 : 일반 보증한도 30억원 → 혁신기업 한도 100억원)

라.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수행 2) 주력산업 지원

◆ 자동차, 조선, 소·부·장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금조달 애로에 대응하여 필요자금을 충분히 지원

1 [경쟁력 제고] 소·부·장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

① (소·부장 전용플랫폼) 소·부·장 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「오픈플랫폼」 구축

* (참여기관) 정책금융기관, 투자기관, 대·중견·중소기업, 시중은행 등
(지원대상) 소부장 기업의 스케일업, R&D, M&A, 대·중견기업 연계 공동투자 등
(지원방식) 소·부·장펀드(0.4조원)과 연계하여 대출, 보증, P-CBO 등 후속지원

② (설비투자) 중소·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공동 「설비투자 붐업(Boom-up) 프로그램」 신설(4.5조원 규모, 최저금리 1.5%) ('20.2월)

* 중소·중견기업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최저 1.5% 금리 대출, 4.5조원

- 산업구조고도화('20년 3조원)·환경안전('20년 1.5조원) 등 기존 경쟁력강화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지원

2 [유동성 공급] 자금조달 애로를 겪고 있는 주력산업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여 사업재편 등을 지원

① (주력산업 P-CBO) 주력업종(자동차·조선·석유화학·디스플레이 등) 중소·중견기업 회사채 매입 지원('20년중 1조원 공급)

② (2년만기 보증) 소상공인, 위기대응지역 내 중소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「만기 2년형 일시상환보증」 지원*

* (통상 보증만기)1년 → (신규상품 보증만기)2년 :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시중 자금 위축이 예상되거나, 장기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한 기업 지원

③ (해운업) 해상 안전제고 등을 위해 연안여객 해운사 등을 대상으로 「연안 여객·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」 마련·시행('20.2분기)

* 20년 초과 선령 비율('18년말 기준) : (연안여객선) 22%, (화물선) 68% 수준

마. 면책제도 개편

◆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을 통해 임직원이 제재·징계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① **[면책대상]** 대출에 한정하지 않고 모험자본투자,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폭넓게 확대('20.1분기 종합방안 발표)

○ 금융회사가 “사전에” 자사의 특정 금융상품·투자업무 등에 대한 면책업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*

* (예) A은행은 새로 출시한 기술력·미래성장성 평가 기반의 기업대출상품이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불확실한 경우 금융위에 면책업무 지정 신청 가능

② **[면책요건]** 신청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규상 중대한 하자 등이 없으면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

③ **[면책절차]** 공정성·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포함된 면책위원회 신설, 금융회사 면책신청제도를 도입

① 금융위에 면책규정 정비, 사전적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「면책심의위원회」(가칭) 신설

② 금감원에 개별 제재건에 대해 금융회사·임직원의 신청 등을 통해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「제재면책심의위원회」(가칭) 신설

* 제재심의위원회와 독립적으로, 제재심의 이전에 면책대상·요건 충족여부를 심의 (제재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제재면책심의위원회 판단을 존중)

< 면책제도 개편방안 >



가. 기관 투자자 육성

◆ 자본시장에 대규모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,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강화

① 은행, 보험 등 대형 금융회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

① 은행·보험·증권·VC 등 은행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협업강화

- VC가 은행·보험사·증권사 등 지주그룹내 다른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 대형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투자
- 여러 자회사에 소속된 혁신투자 인력을 모아 지주회사 차원의 조직을 만들어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 창출

< 모험자본 공급 확대 >



< 계열사내 협업 강화 >



② 금융관련업종으로 한정된 은행·보험 자회사 범위를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(20.下)

< 자회사 범위 확대 >



② [초대형 IB] 고유자산 투자확대, 리스크 관리 역량제고 등 투자은행(IB) 기능강화를 지원(‘20.1분기 중 방안발표)

① (고유자산 운용) 중소·벤처지원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고유자산 투자(PI) 관련 제도를 정비

- 혁신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자본건전성 관련 제도를 보완(☞p.27-28참조)
-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한도*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(자기자본의 일정비율[예:30%] 이내)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

* '18.9월 종투사의 신용공여한도가 자기자본의 100%에서 200%로 확대 → 확대된 추가한도는 중소기업·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한정

② (건전성) 영업행위 관련 사전적 규제를 완화*하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사후감독을 강화

* 정보교류 차단 업무위탁 등 영업행위 규제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

③ (해외진출)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석, 구조화금융자문 등 관련 국내 증권사의 역량 증진을 지원

-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·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금융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* (예) 금투협·플랜트협회·해외건설협회 등 간 정보공유 MOU, 수은·KIC·초대형IB간 공동자문 우선추진 업무협약 등

③ [스케일업펀드]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여 혁신기업에 투자

* 공공자금 31.7%(재정 5.8% 등), 민간자금 68.3% ('18년 조성금액 기준)

- 성장지원펀드 확대·개편으로 '22년까지('19~'22) 12조원 규모로 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하여 기업 성장단계를 집중 지원

- 이미 조성된 자금('18년 2.94조원, '19년 2.75조원)을 차질없이 투자집행

나. 자본시장 투자 저변확대

◆ **세제 선진화,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 촉진**을 통해 국민들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

① 장기투자 유도 등을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('20.上)

- 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하여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 마련
- ②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·이월공제·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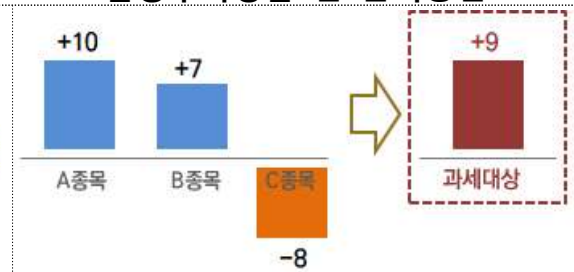
< 금융세제 개선방안(예시) >

- ① 주식, 펀드,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허용 여부 검토
- ②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검토
- ③ 단기 투지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 강구

<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간 역할 조정 >



<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>



※ '19.3월 「혁신금융 추진방향」에서 발표 → 기재부·금융위·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TF 논의중

② 일반국민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마련

① 중산층의 투자수단 다변화를 위한 공모펀드 활성화('20.上)

-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 상품* 도입

* 예) 외화표시 MMF, 주식형 액티브 ETF 도입

- 펀드 해외판매 활성화, 규제개선, 경쟁촉진 등*을 통해 자산 운용사의 경쟁력 제고하고, 투자자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

* 예)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제도(한국·일본·태국·호주·뉴질랜드 간 펀드교차 판매 간소화) 시행, 불필요한 보고·공시 의무 완화, 마이데이터를 통한 판매채널 개선 촉진 등

②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개발여건을 마련

- 해외 우량주식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ETN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
- 증권사가 직접 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·적정성을 전제로 자체지수산출을 허용

* 지수산출기관에 대한 사전적 규제 대신 증권사(ETN발행사)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지수산출 관리책임 강화

③ 비상장주식, 메자닌채권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투자 제약요인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개선

① (투자플랫폼) 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(‘20년말 시범서비스 개시, 예탁원)

-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던 비상장사의 증권발행,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·표준화*하여 비상장투자의 신뢰성·효율성 제고

* [현행] 표준양식이 없는 ‘주권미발행확인서’를 발급·유통하나 위·변조에 취약하고 거래가 불편(회사방문 필요) → [개선] 온라인을 통해 발급·교체 가능

- 벤처투자 참여자(LP, GP, 신탁사 등)간 업무(운용지시 등)를 효율화

* [현행] 신탁사는 GP로부터 연간 수만건의 비상장 투자 운용지시를 이메일 등으로 전송받아 담당직원이 수기로 업무처리 중 → [개선] 플랫폼을 통해 전산화·자동화

② (메자닌채권) 투자자 보호를 위해 CB·BW 발행내역 등 공시 확대,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등을 추진(20.上)

- CB·BW 발행으로 의결권 등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발행규모·조건 등에 대한 공시의무 확대

* (현행) 상당수 기업이 납입일에 임박(당일 또는 익일)하여 채권발행을 공시 (개선) 납입일 1주일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·공시 의무화 등

- 과도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기존 주주의 피해*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환가액 하향조정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화**

* 전환가액 하향조정시 전환을 통해 받게되는 주식 수가 증가(기존 주주의 지분 감소)

** 전환가액 조정가능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, 그 외의 조정은 주주 동의를 의무화

다.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 정비

- ◆ 창업에서 성장·회수까지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 구축

1) 창업단계

- ① **[창업보육]** 혁신 창업기업 발굴·보육을 위해 종합창업지원 공간(마포 'FRONT 1')을 마련하고, 패키지 금융지원('20.6월)

*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(무상), 자금지원, 체계적 보육, 경영컨설팅을 종합제공

< 기관간 역할분담(안) >



- ② **[크라우드펀딩]**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활성화

- ① **(대상기업)**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* 및 코넥스 기업(3년 이내)의 크라우드펀딩 허용('19.5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제출 등)

* (현행)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→ (개선) 모든 중소기업

- ② **(자금조달)** 조달한도 완화 등 자금조달 확대방안* 검토('20.上)

* 전문투자자를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(15억+a 조달 가능), 광고규제 완화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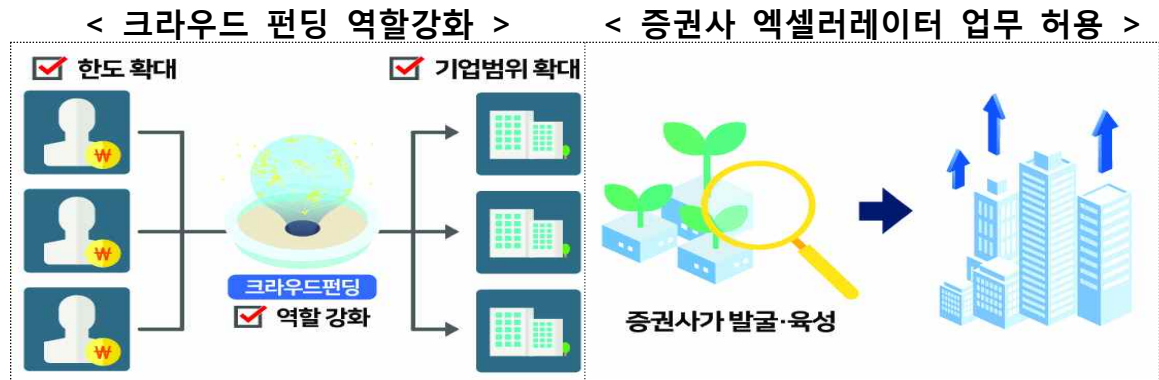
- ③ **(중개업자 역할 강화)** 발행기업 경영자문·후속투자 및 既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매매중개 허용 등 검토('20.上*)

* 발행기업 경영자문의 경우는 '19.5월 국회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

- ③ **[엑셀러레이터]** 초기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·육성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에게 **엑셀러레이터*** 겸업을 허용(20.上)

* 창업자 선발 및 Seeding투자, 창업자 전문보육 지원 등의 역할

※ 관련규정(금융투자업규정) 개정 이전에도 **혁신금융서비스** 신청을 통해 **엑셀러레이터**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


2) 성장단계

- ① **[증권사] 벤처대출 활성화, 건전성 규제 정비** 등을 통해 성장 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(20.上)

- ❶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하여 장기적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은행(SVB, 벤처대출 전문은행)으로 육성

< 벤처대출 개요 >

- (개념) 벤처대출(venture debt)은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의미
- (필요성) 은행 대출이 어려운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촉진을 위해 전문성과 위험인수 역량을 지닌 증권사의 부채성 자금공급 활성화 필요
- (해외사례) 미국 벤처대출 시장규모는 VC 투자규모(842억달러)의 15% 수준인 약 126억달러로 추정('17년말 기준)

- ❷ M&A 리파이낸싱,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증권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

③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세분화, 조정하여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

- * ① 중소·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 축소
- ② 지적재산권 등 비금융자산을 담보로 인정하여 순자본액 차감부담 완화
- ③ 중소·벤처기업의 경우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을 상향 조정(현재 기업지분의 5% 초과 보유분에 대해서는 위험액을 가중)

② [BDC] ‘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*(BDC)’ 도입을 통해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(‘20.1분기 입법예고)

- *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

○ 기존 Vehicle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·사모 펀드 하이브리드 형태로 설계하고, 다른 Vehicle의 전문성도 적극 활용

- * ① 자산운용사 + 증권사, VC 등 다양한 플레이어 진입 허용
- ② 공모펀드 보다 완화된 운용규제 적용(대출·차입 허용, 동일기업 투자한도 확대)
- ③ 운용사는 BDC자산의 5% 이상을 출자하여 5년 이상 의무보유



③ [회사채] 스케일업 기업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유동자금을 흡수(‘20.上)

① 금융회사의 기관투자자전용 QIB채권 투자제약요인 해소

- * QIB채권이 “유가증권”이 아닌 “대출채권”으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투자금지 규제 또는 건전성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

② 전문투자자 중심의 중소·혁신기업 사모사채 발행·유통 플랫폼 구축

- * 전문투자자 사이에만 유통되는 사모사채는 50매 이상 발행 또는 권면분할을 허용하고, 금투협에 발행·유통 정보를 집중하여 게시

3) 회수 및 재투자의 선순환체계 구축

① **[K-OTC]** IPO 전 중간회수시장으로서 K-OTC시장의 위상을 제고

① **(비상장기업 주식거래 활성화)** 혁신기업의 K-OTC시장 거래 제약 요인 해소*를 통해 기업참여를 촉진('20.上)

*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이 K-OTC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발행의무가 있는 '매출'로 간주하지 않음

② **(투자자보호)**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 및 허위공시·공시누락에 대한 제재강화 검토('20.下)

② **[IPO]** 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모가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('20.上)

① 증권신고서 제출 전 일정 범위의 기업정보 제공을 허용하여 기관투자자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부여

* 현재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서면·구두 의견교환을 허용

② 공모주 배정과 관련한 주관사의 자율성을 확대*하고 상응하는 책임도 강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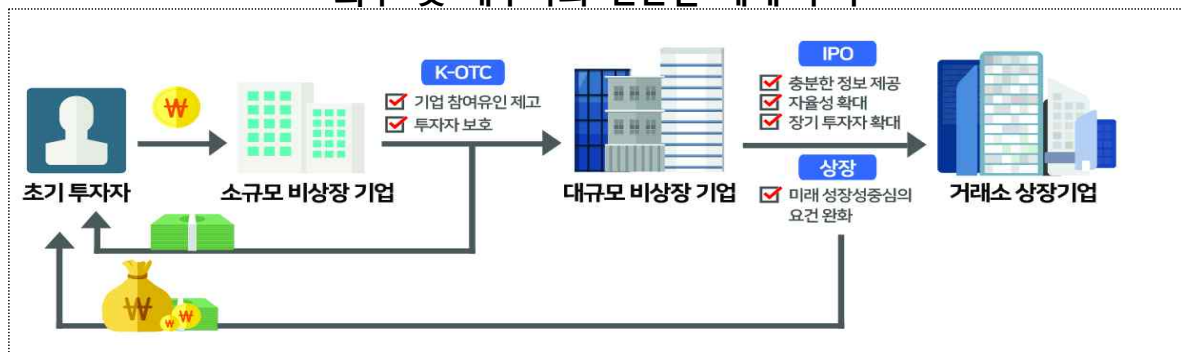
* 기관투자자가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일정 물량을 인수하기로 사전 약정할 수 있도록 허용(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) 등

** 주관사의 기업실사 책임 강화, 코너스톤인베스터의 보호예수기간 부여 등

③ **[상장]** 현행 과거실적 중심의 진입요건을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시장평가(시가총액) 중심으로 정비('20.上)

* 기존의 복잡한 상장경로(코스닥 : 상장경로가 11개로 세분화, 코스피 : 시가총액&자기자본 동시 적용 등)를 시가총액 중심으로 정비

< 회수 및 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 >



가.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: 1) 진입규제 완화

◆ 금융산업에 경쟁을 통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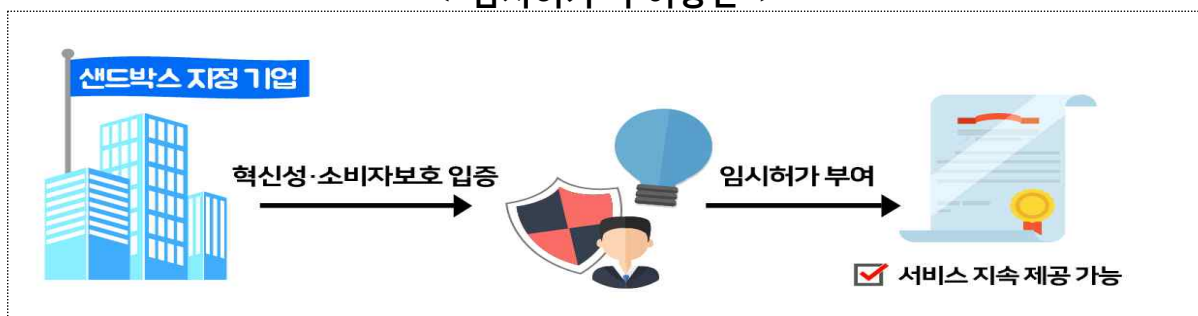
- ① **[스몰라이센스]** 소규모·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·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

* 소액신용공여업, My Payment업, 비금융전문CB, 개인사업자CB 등을 도입.
보험업은 업무범위, 위험 등에 따라 자본금, 영업규제 등을 세분화

- ② **[임시허가]**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제도 도입('20.12월~)

- 샌드박스 테스트 결과 혁신성,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이 입증되었으나, 개별법에 따라 인가를 받을 근거가 없는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(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사항)

< 임시허가 부여방안 >



- ③ **[경쟁도 평가]** 소비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업권별 평가를 기능별 평가로 개편 추진(중장기)

* 기능별 평가(예) : 은행, 인터넷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여수신 기능, 신용카드업·전금업자 등을 포함한 결제기능 등

가.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: 2) 영업규제 합리화

◆ 해외진출 활성화, 영업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

1]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협력,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

① (新남방)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·인도 지역 금융당국간 협력을 제고*하고, 금융회사 진출 및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 강화

* 금융협력포럼 및 공동 세미나 개최, 금융분야 관계자 단기초청연수 및 장기 장학지원 프로그램 운영, MOU 체결 등 신남방 국가 금융당국과 협력 강화

- 신남방진출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(1,000억원 규모)

* ① 해외진출보증 설명회 개최, KOTRA 등 유관기관과 해외진출 관련 협의체 구성
② 신보 현지사무소(베트남)를 통해 현지 시장조사, 해외업체 신용조사 등을 지원

② (新북방) 신북방 국가와 금융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*하고, 금융감독 분야 협력 등을 위한 MOU 체결 추진

* 지급결제 및 신용·기술평가 시스템, 증권거래 인프라 등 수출기반 마련

- 고부가가치산업 분야 한-러 협력강화를 위해 총 10억달러 규모의 소재·부품·장비 공동투자펀드 조성('20.上, 산·수은 등)

③ (해외진출 규제) 해외 진출에 부담이 되는 사전신고 부담 완화*

* [현행] 신규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원칙, 역외금융회사현황 每분기 보고 등
→[개선] 일정금액 이하 투자 사후보고대상 확대, 보고주기 연장(분기→年1회)

2]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해 업무범위 확대 등 규제합리화

① (부수업무)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* 부수업무 허용 검토

*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시스템을 지원

② (카드사) My Data(본인신용정보관리업), 개인사업자CB업, 보유 데이터 판매 등을 허용하여 빅데이터 시너지 창출을 도모

* 부수업무인 렌탈 취급대상 확대, 레버리지규제 완화 등도 병행 추진

③ (신기술금융회사) 벤처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 핀테크 등 新 융·복합부문 투자허용* 등 규제 정비('20.1분기 방안 발표)

* [현행] 여전법상 신기술금융회사의 금융·보험업 및 부동산업 투자가 대부분 금지
→[개선] 금융·보험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 허용

< 카드사 데이터 新산업 허용 >



< 신기사 투자 확대 >



④ (신용평가업) 회사채 평가 위주의 신용평가체계를 개선*('20.上)

* (현행) 신용평가 시장에서 구조화금융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(65%)이 높음
에도 관련 제도는 회사채 평가 중심으로(33%) 운영
(개선) 구조화금융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(예 : 이해상충 점검시 SPC뿐만 아니라 자산보유자, 주관회사 등까지 점검범위 확대 등)

⑤ (저축은행) M&A규제 합리화, 규모·지역 차이를 감안한 건전성·영업규제 차등화* 및 지역·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('20.上)**

* (예) 대형사에 건전성 규제 강화, 중소형사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완화 등
** (예) 소상공인·소기업 보증부 중금리 대출 확대, 생활권 고려한 영업구역 일부 확대 등

③ 노후대비, 국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 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를 전면 개선(20.下)

① (재산범위 확대) 수탁재산 범위를 적극재산(금전, 부동산 등)에서 소극재산(자산에 결합된 부채) 및 담보권 등으로 대폭 확대*

* 부채를 포함한 예금, 대출, 부동산 등 재산일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자산관리 가능

② (진입규제 정비) 전문 신탁업 인가단위 신설 등을 통해 특화 신탁사(지식재산권 신탁, 유언신탁 등)의 진입을 촉진

③ (운용방식 다양화) 자기신탁·재신탁 등 신탁법으로 허용된 운용방식을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

가.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: 3) 책임성 강화

◆ 금융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
고객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

1] 단기실적주의 해소를 위해 장기적 관점의 리스크 관리·소비자 보호 경영을 위한 성과·보상체계 개선안 마련(‘20년중)

* (예) 성과지표 중 단기재무지표 비중 제한, 성과체계 및 보수체계 공시
구체화 등 (업권별 모범규준 마련 등)

2] 보험산업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

① (광고)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상품명 정비*, TV광고 규율강화**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(‘20.上)

* 객관적 근거없는 과장표현, 보험상품 특징·보장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 금지

** (홈쇼핑) 생방송 허용범위를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으로 한정

② (판매채널) 보험모집의 건전성·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GA 책임경영 강화 등 판매채널 선진화 방안* 검토(‘20.下)

*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가입시 소비자보호 강화, 복합점포 성과점검,
전자금융업자의 대리점 등록허용 검토 등

③ (손해사정) 민원발생이 많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(‘20.下)

* ① (공정성) 손해사정 업무 관련 내부통제절차 강화, 공공손해사정사 도입 방안 검토 등

② (역량강화)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정비 및 보수교육 도입 등 전문성 강화

③ (질서확립) 과태료·과징금 등 불법행위 제재근거 마련

3] 금융투자상품, 증권담보 대출 관련 투자자보호를 강화

① 공모규제 회피를 철저히 차단하고, 고위험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투자자 설명의무 등을 강화(‘20.上)

* ① 동일증권 판단기준 적극 적용, OEM펀드 판매사 제재근거 마련

②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녹취·숙려의무 강화 및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

③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조·판매 영업행위준칙 시행 및 경영진 책임 강화

② 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(대출) 거래시 일률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담보비율, 과도한 반대매매 요건 등을 개선(‘20.上)

나. 핀테크 · 디지털금융 혁신

◆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, 데이터·지급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혁신이 지속 창출·확장될 수 있는 환경 조성

① **[핀테크 육성체계 강화]**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금·예산·해외진출 등 쏠분야에 지원기반 대폭 확충

① **(보육·투자)** 핀테크 랩 등 보육인프라를 확대하고, 「핀테크 혁신 펀드」(‘20년 825억원→4년간 3,000억원)를 통해 자금지원

※ 핀테크 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 역량 및 조직 강화

② **(예산인력)** 금융 테스트베드 비용 등 예산지원* 확대 및 핀테크 특화교육·인턴십 지원 등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

* 테스트비용 지원(52.5억→80억) 등 (‘19년)101억원 → (‘20년)199억원

③ **(해외진출)** 해외 핀테크 랩 등 금융권-핀테크-정부 간 협업을 활용한 ‘핀테크 로드’ 개척 및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(‘20.5월) 개최

② **[규제]**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 구조 등 역동적·지속적인 규제개선 체계 확립

① **(금융규제 샌드박스)** 시행 1년(‘20.3월)간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고, 신산업·주요과제 등도 적극 검토

-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동태적 규제혁신* 및 컨설팅 중심의 감독·검사 추진

* (개선과제)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(‘19.10월 既개선), SMS 추심이체 출금 동의 규제, 온라인 대출모집 1사 전속규제, 소수단위 주식 매매중개 등

② **(맞춤형 규제혁신)** 해외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통한 글로벌화·다양화를 위해 맞춤형 핀테크 규제개선 추진

* 지급결제·플랫폼 / 자산관리 / 보험 / 대출·데이터 4개 분야별 과제 도출

③ **[데이터 경제]** 금융분야 데이터가 핀테크 및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·보호 기반 확대

① **(신산업)** 마이데이터 및 비금융정보 전문CB, 개입사업자 전문CB 도입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('20.8월~)

< 마이데이터 산업 기대효과 >



② **(정보보호)**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 보장('20.8월~)

- * ① 정보보호 상시평가 및 컨설팅('20.8월), ② 정보활용 동의체계 개편('20.8월), ③ 소비자 권리보호 플랫폼('20.10월)

③ **(빅데이터 인프라)** 데이터 유통·결합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분야 3대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('20.3월~)

- * ① 신용·결제정보 개방시스템(신용정보원, 금융결제원) 고도화(연중), ② 데이터 거래소(금융보안원, 3월), ③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(신정원·보안원 등, 8월)

④ **(공공데이터)** 금융공공기관의 기업정보 등*을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마련('20.4월~)

- * 기업정보, 자본시장정보, 금융회사정보, 국가자산공매정보, 공시정보

④ **[디지털 금융]** 데이터 경제와 함께 디지털 금융혁신의 兩大 축인 디지털 금융 분야의 산업·시장·인프라 전반을 고도화

① **(오픈뱅킹)** 전면시행에 이어 결제 인프라 혁신의 확장성 및 안정성 확보 추진(연구용역 → '20.上,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마련)

- 제2금융권 참가확대 등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고, 이에 따른 금융보안 및 이용자 보호도 강화

② (전자금융업) 유니콘 기업의 활발한 출현과 핀테크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등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편('20.上)

- MyPayment,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으로 간편결제·송금,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금융플랫폼을 활성화

③ (이용자 보호) 전자금융업자의 고객자금 보호 의무를 신설*하고 플랫폼 영업 규율을 확립**하여 선진국 수준의 보호체계 도입

* 고객 선불충전금에 대한 외부기관 보관 및 관리 의무 부과

** 신의성실, 차별금지, 오인방지, 이용자 선택권 보장 등 영업시 행위규칙 확립

⑤ [신산업] 핀테크 혁신이 융합·확장될 수 있도록 P2P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산업 적극 발굴·육성

① (P2P) P2P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* 구축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** 등을 병행('20.8.27)

* 투자·대출 이력을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, 법정협회(자율규제 기관) 등

** 차입자에게 부당한 금전 요구 금지, 대출한도·투자한도 설정 등

② (AI) AI산업 육성 및 글로벌 AI 서비스 경쟁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금융분야에 특화된 AI 서비스 활성화 추진('20.3월~)

* ① 「금융권 AI 활용 가이드라인」 마련, ② 「AI 테스트베드」 운영,

③ AI활용 자동화 평가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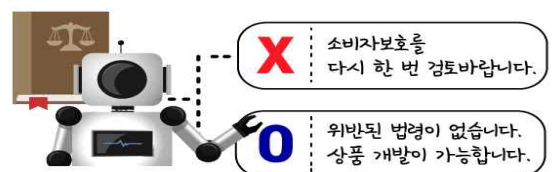
③ (레그테크)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및 감독·검사 효율화를 위한 레그테크(RegTech) 분야 지원방안 마련('20.3월~)

< AI 활용 예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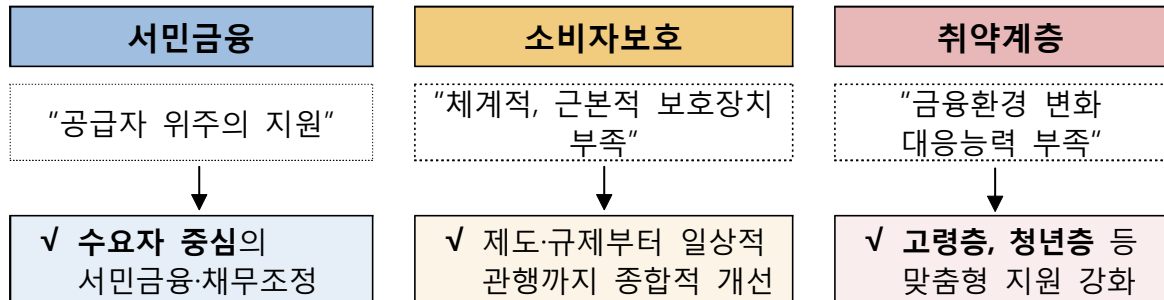


< 레그테크 활용 예시 >

Q. 새로 개발하려는 상품이 금융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나요?



◆ 일반 국민의 금융·경제 생활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역할 강화



■ [제④과제] 서민금융 안전망 획기적 개선

- 가. 정책서민금융 재원확충 및 공급확대
- 나.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 체계 강화
- 다.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전환

■ [제⑤과제]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

- 가.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
- 나. 실생활밀접 금융개선
- 다. 금융교육체계 전면개편 추진

■ [제⑥과제]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강화

- 가. 자영업자 경영애로 대응
- 나.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
- 다. 장애인 금융소외·차별방지
- 라. 청년 경제자립 지원

가. 정책서민금융 재원확충 및 공급확대

◆ 저신용 서민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('20.上 서민금융법 개정 추진)

- ① **[공급규모]**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간 7조원 수준으로 공급('16~'19년 연평균 6.7조원 공급)

※ 서민금융 공급규모

- ① (햇살론¹⁷)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급목표 확대: '19년 4천억 → '20년 8천억
- ② (근로자햇살론)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2.2조원 공급
- ③ (미소금융·새희망홀씨 등) 전년대와 마찬가지로 4조원 수준 공급

- ② **[재원확보]** 재정지원 확대^①, 금융회사 상시출연제도 도입^②, 휴면 금융자산 출연범위 확대^③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 추진

- ① (재정) 복권기금 출연기간을 5년 연장('16~'20년 → '21~'25년)하고 연간 출연규모를 확대(1,750억원 → 1,900억원)

- ② (금융회사) 출연의무 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*하고, 가계대출 규모 등에 따라 출연금 부과

* [현재] 상호금융, 저축은행 / 연간 1,500억원 수준 / 한시적 출연

→ [개선] 은행, 보험사, 여신전문금융회사 추가 / 연간 2,000억원 수준 / 상시출연

- ③ (휴면금융자산) 출연대상 휴면금융자산 범위를 투자자 예탁금 (10년 이상 미거래) 등으로 확대

- ③ **[고객 권리보호]**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편의제고 및 권리보호 강화

- ① 고객 신청으로 원권리자에게 휴면금융자산 반환시 온라인 (서민금융진흥원 앱 등) 지급한도 상향(50만원→1,000만원, '20.上)

- ② 휴면금융자산 대고객 통지 강화(1회→2회), 통합 공시시스템 구축(보유·관리·사용 현황 공시)

나.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 체계 강화

◆ 시장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·공급될 수 있도록 상품 설계방식, 대고객 채널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

① [수요자 맞춤형 상품] 시장·금융회사가 주도하는 상품개발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민상품 개발 촉진('20년중 방안 검토)

① (개발방식) 금융회사에서 상품을 설계·제안하고,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간 협의를 거쳐 新상품 출시

② (상품내용) 직업·소득·재무상황 등 고객 특수성을 반영하고, 업권별 주요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상품 개발추진

※ 상품개발 예시

- (상호금융) 농림어업 종사자 특성에 맞게 농지·토지규모, 평균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'농림어업인 전용 생계자금상품' 개발
- (카드사)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제공하는 '저신용자 전용 소액신용카드 상품' 개발

② 일반국민이 정책서민금융을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, 어카운트 인포와의 연계 추진('20.上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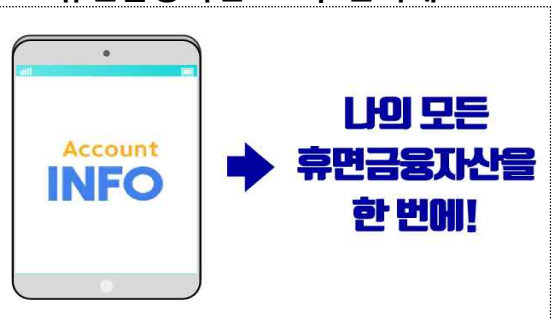
① (정책서민금융) 금융자산관리·대출중개앱 등 혁신금융서비스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를 연계

② (휴면금융자산) 어카운트인포에서 모든 휴면금융자산을 일괄 조회 가능토록 개선

< 정책서민금융-혁신금융서비스 연계 >



< 휴면금융자산 조회 편의제고 >



다.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전환

◆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하는 한편 공적 채무조정제도 내실화

① **『소비자신용법』^(가칭) 제정** 채무자 재기지원과 추심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·방법 규율을 마련(대부업법 전부개정)

① 상환조건·계획 변경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‘채무조정요청권’ 도입

- 상환능력이 감소한 연체채무자는 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
→ 채권금융기관은 요청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자에 응답 의무
- 채무자의 경험과 지식 부족을 보완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를 위한 ‘채무조정교섭업’ 도입

② 연체가 지속되는 한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 한정

- 기한이익 상실시 원금 전체에 대한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연체되지 않은 원금에까지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 제한
-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합리적인 ‘소멸시효연장기준’*을 마련·적용토록 하고, 시효완성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과 매각 제한

*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연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

③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과잉추심 제한

- 추심연락횟수를 제한하는 ‘추심총량제’ 및 채무자가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 등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‘연락제한요청권’ 도입
- 주요 불법·과잉추심 행위에 대해 ‘법정손해배상’ 도입

④ 과잉추심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추심시장 건전성 제고

- 매입채권추심업의 레버리지한도(10배) 축소 및 대부업 겸영* 금지

* 매입추심업 1,054개 중 647개가 대부업 겸영 중 [’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]

② [신복위 채무조정] 신복위 채무조정의 내실화와 사각지대 해소

- ❶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모바일 신청제도* 신설('19.12월~), 금융권의 연체채무자 자체 정보체계와의 연계** 등 홍보강화('20년~)

*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앱을 통해 채무조정 간편신청 가능('19.12.2일 오픈)

** 연체우려 사전경보, 연체발생 통지시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기회도 함께 안내

- ❷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계층 활용가능방안 검토

-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특별감면제도* 및 상환유예 제도 등 개선방안 마련('20.下)

* 기초수급자·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대 95%까지 채무감면

- 중도탈락자에 대해서도 무료신용상담* 등 추가 지원 강화('20년~)

* 신복위-민간신용상담기구 연계 통해 중도탈락자 대상 신용상담 제공

- ❸ 채권자의 채무조정안 부동의(不同意) 빈발사례*를 분석하여 채무조정 동의율 제고방안 마련('20년중)

* 평균 부동의율은 7.1%로 낮은 편이나, 대부업(13.7%), 자산유동화회사(7.2%) 주로 부실채권 매입업체 위주로 부동의 빈발

- ❹ 신복위 신청시 통신채무* 등 신용회복위원회 협약外 채권은 통신사를 통해 채무조정 받을 수 있도록 연계('20.3월~)

* 신복위 채무조정자의 통신채무에 대해 통신사가 최대 5개월 분할상환 허용('20.3월)

③ [주담대 채무조정] 1주택 서민차주*의 주거안정과 재기지원 강화를 위하여 「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」 도입('20.3.2일 시행)

*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, 주택가격(시가)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

- ❶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서민차주를 자산관리공사의 매입형 채무조정*으로 연계하여 추가 채무조정 기회 부여

* 자산관리공사가 채권매입 후 연체이자 감면·만기연장(33년)·금리조정(4%) 제공

- ❷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으로도 상황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특화된 '新 Sale & Leaseback' (주택매각 후 재임차) 프로그램 신설

* ❶차주가 보유주택을 매각해 일시에 채무상환 후(Sale), ❷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하고(Leaseback), ❸임차종료 시 주택 재매입권 부여 (buyback)

가.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

◆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정 등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, 내부통제, 분쟁조정,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

① [판매규제]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상 6大 판매원칙*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현장감 있게 설계

* 고객의 적합성·적정성 확인, 설명의무 준수, 부당권유·불공정영업·허위과장 광고 금지


①	<p>< 적합성·적정성 원칙 ></p> 	<p>소비자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<u>대출상환능력·투자성향 등 세부 평가기준을 구체화</u></p>
②	<p>< 설명의무 ></p> 	<p>금융거래 시 소비자가 원금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의 핵심정보*를 간략히 정리한 “<u>핵심설명서</u>” 교부를 의무화</p> <p>* (예) 위험등급, 고객부담비용, 잠재적 손익 등</p>
③	<p>< 부당권유금지 ></p> 	<p>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권유하도록 금융회사에 “<u>상품숙지의무</u>”(know your product) 부과</p> <p>* 상품의 중요정보 숙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</p>
④	<p>< 불공정영업 제재 강화 ></p> 	<p><u>징벌적 과징금*</u> 부과기준 마련 시 특히 꺾기, 연대보증·과도한 담보 요구 등 불공정영업, 허위·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</p> <p>*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정 시 절대금액 상한없이 관련 수입의 50%까지 부과 가능</p>

② **[내부통제]**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(설계-판매-사후관리)에 대한 “**내부통제기준**”을 법제화

- * ① 소비자보호 기능 수행 '심의기구'(의장: CEO), '전담조직' 조직 내 설치 의무화
② 판매 전 “소비자영향평가”, 광고 심의, 판매 후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절차 규정화

○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마련하지 않거나,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경우에는 법령 위반으로 엄정 조치

③ **[분쟁조정]**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^①· 수용성^②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

< 제도개선 방향 >	< 주요 세부내용 >
<p>①</p>  <p>전문분야 경력자 심사위원 무작위 선정</p>	<p>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·중립성 확보를 위해 전문분야(법률·의학 등) 경력요건 신설, 전산 등을 통한 <u>심의위원 임의 선정</u> 추진</p>
<p>②</p> 	<p>분쟁조정위원회에 <u>의무적으로 회부·심의</u>해야하는 사항을 확대*하고, 조정당사자의 분조위 회의 <u>출석·항변권 보장</u></p> <p>* (예) 유사한 다툼을 겪는 소비자나 다투는 금액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</p>

④ **[감독시스템]** 고난도 투자상품 등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

① 빅데이터*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정보 발령, 판매제한명령이 가능하도록 감독시스템을 구축

* 금감원에 연내 빅데이터(민원정보, 상품정보 등) 분석 시스템 구축 완료 계획

② 금융상품에 대한 효과적 분석 및 체계적 관리·감독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 내 관련 조직·인력을 확충

나. 실생활밀접 금융개선

◆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적인 금융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·개선

1 [자동차보험]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 마련(국토부 협업, '20.1분기)

①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* 도입

*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, 30만원,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,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,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

②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 강화

③ 과소지급 문제제기가 있는 군인*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 제고

*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(또는 군복무 예정자)이 교통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시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

④ 새로운 형태의 운행방식 출현에 따른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보험상품 개발 추진

< 보험료·보험금 산정기준 합리화 >



< 자동차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 >



② **[실손의료보험]**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('20.2분기)

- ① 상품구조 개편*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

*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(할인·할증) 도입,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 등

- ②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* 개선을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 도모

* 현재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병원으로부터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직접 팩스로 전송하거나, 사진을 찍어 보험회사앱 등을 통해 제출

③ **[신용카드]** 금융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 도입('20.10월)

* [현행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각 카드사별 포인트를 조회만 가능
→[개선] 조회된 카드포인트를 일괄하여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 추가

④ **[제출서류]** 금융거래 제출서류 일제 정비* 및 금융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** 등을 통해 소비자 서류 부담 대폭 경감

* (예) 자동차할부금융 이용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함에도 인감증명서 요구

** 행정정보 공동이용 금융회사 및 이용가능 정보 확대 추진



⑤ **[주거비용]** 전세대출자의 전세금 손실위험 경감을 위해 주금공이 '전세대출보증+전세금반환보증' 결합상품 출시('20.上)

- 연간 4.0만 차주의 전세금 8조원에 대한 손실위험을 예방하고, 가입비용도 평균 30%수준* 완화 기대

* 주금공 전세대출보증 가입 및 타기관 전세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시 대비 절감예상분

다. 금융교육체계 전면개편 추진

◆ 소비자 개개인이 금융문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금융교육의 체계적·효율적 지원 추진

① [콘텐츠] 교육기관별로 산재된 교육콘텐츠의 체계적 관리 도모

①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·개발을 위해 “금융이해력지도*”를 설계

* 교육콘텐츠 관리·개발 틀(frame)로서, 생애주기단계별(청소년, 청년, 중·고령층)로 필요한 금융지식을 정립 → 금융이해력지도에 따라 기존 콘텐츠를 분류하고, 신규 콘텐츠를 개발

② 콘텐츠가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(fashionable), 적시성(timeliness)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“콘텐츠 개발 기본방향”을 설정

③ 콘텐츠의 유용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인증제를 도입

② [전달채널]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달채널을 체계화·다양화

① 직장(중소기업, 스타트업 등)·지방 금융교육의 기초 인프라로서 전국 각지에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*을 확보

* 금융권, 지방상의,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일자리센터, 복지관 등 활용 추진

② 교육콘텐츠를 종합 제공하는 “온라인 콘텐츠 플랫폼”을 구축

③ [교육인력] 양질의 교육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

① 금융교육 강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*을 구축

* 금융교육 강사 기준 마련, 금융교육 강사 DB 구축 등

②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하고, 개별 연수기관(금감원, 청소년금융교육협 등)의 프로그램을 표준화

④ [추진체계] 금융교육협의회 중심으로 교육전반이 체계적으로 총괄·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(금융위 규정 신설)

가. 자영업자 경영애로 대응

◆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, 재기지원 강화

① (자금지원) 자영업자 영업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금 공급

① 영세가맹점*이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상품 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신속 지원**

* 2020년 상반기 기준 영세가맹점은 약 211.2만개(전체 가맹점의 75.1%)

** [현행]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매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하여 영세가맹점이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최대 4일 소요 → [개선] 주말 중 카드승인액 일부를 조기 지급

- 주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하는 영세가맹점의 금융 부담을 경감

② 소상공인에 대한 1%대의 초저금리('20.1.15일 현재 1.48%) 대출 등 맞춤형 상품 공급(기은, 2.7조원)

③ 소상공인의 상거래채권 기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「플랫폼 매출망금융」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조성

* P2P, 빅데이터 등 핀테크 기술을 통해 상거래매출채권(어음·외상매출채권·카드매출채권 등)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

**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하여 대기업 신용이 없거나 부동산 담보·보증이 부족하더라도 경영실적과 성장력을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함

② (재기지원) 「자영업자¹²³ 재기지원 프로그램」을 통해 ①연체 채무정리, ②신규자금조달, ③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('19.11월~)

* ① 채무조정 초기 2년간 상환유예 혜택 → 3년차 이후 최대 10년간 분할상환

② 채무조정 확정시 질적심사를 거쳐 재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지원

③ 재창업자금 신청시 사전컨설팅 실시 → ② 질적심사시 참고

나.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

◆ 금융이용에 차별·소외되지 않도록 금융접근성 강화, 금융교육 제공, 금융학대 방지 등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

①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접근성 강화

❶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 점포 통합·폐쇄시 대응책 마련

- 지점 폐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 연장(예 : 1개월 → 3개월)하는 등* 사전절차 보완·강화

* 지점 폐쇄 영향평가지 외부 평가위원 참여 등 추진

- 점포 통·폐합 지역에도 금융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동점포·무인점포* 및 타 금융회사와의 제휴 활성화** 추진

* 스마트텔러머신이 입출금 및 계좌 송금 등을 수행하고, 사용법 교육도 병행

** 폐쇄된 점포 인근 타 은행, 우체국 창구 등에서 계좌조회, 입·출금 등을 이용

❷ 디지털 금융 활용을 어려워 하는 고령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‘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’* 마련·출시

* (예) 큰 글씨, 쉬운 인터페이스,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로 구성

❸ 온라인 우대상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고령층을 위해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대면거래 상품 개발·출시

② 고령층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제공

❶ 전국 지역별 고령층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고령층 주요 생활공간(예, 복지관 등)과의 연계 강화

❷ 고령자의 필수 금융지식 강화에 적합한 교육콘텐츠* 개발·제공

* 신용회복제도,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방지, 고령층 맞춤형 금융상품정보 등

❸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디지털금융 맞춤형 교육 실시

*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고령층 디지털금융 교육 대폭 강화 등

③ 고령층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·강화

① 지인에 의한 재산 편취 등 금융착취(Financial Abuse) 방지 방안 마련

< 금융학대 방지 방안(예시) >

- i) (사전감시) '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징후 감시시스템' 설계·도입
 - * 비활성계좌 거래, 주소변경, 인출 급증, 공동계좌 개설 등 이상징후 탐지
- ii) (거래처리시) 의심거래 발견시 '거래처리 지연·거절 및 신고체계' 구축
 - * (美 Senior Safe Act) 금융회사 직원이 학대 의심거래 공개(disclosing)시 민사·행정소송 면책
- iii) (사후 모니터링) '제3자에 의한 고령자 거래내역 모니터링'
 - * 사전에 인증된 가족 등 제3자가 고령자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

② 고령층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

- * (예) ① 금융회사의 고령자 이용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나리오 적극 개발·공유 촉진
- ② 고령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(1회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인출·이체 제한, ATM·한도계좌 등의 1일 출금한도 제한) 확대 등도 추가 검토

③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규제 및 제재 강화

- * (예) ① 금융상품 개발시 고령자 영향평가 의무화 등
- ② 고령층中 취약계층(저소득·저신용·금융경험 부족 등) 피해에 대해 가중 제재

④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 특화상품 마련·제공

① (신탁) 고령층 자산관리 니즈에 부합한 신탁상품* 공급 활성화

- * (예) 스몰라이선스 인가를 받은 전문 신탁업자를 통해 유언대용신탁 등 서비스 다양화

② (보험)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과 치매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치매 보험상품*을 주택연금과 연계하여 상품성 제고

- * (예) 치매보험 상품에 주택연금 고객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 등 제공

③ (주택연금)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 추진

- * ①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을 60세 이상 →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
- ② 가입가능 주택가격을 시가 9억원에서 상향하고,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
- ③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을 허용하고,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수급권 자동승계

다. 장애인 금융소외 · 차별방지

◆ 금융이용에 차별·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

① 장애인 소외 방지·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속 발굴

①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범용화된 장애인 ATM 개발, 보급 지속 확대

* '19.9월말 현재 '장애인을 위한 CD/ATM 표준'에서 요구하는 '점자표시·화면확대·이어폰잭·휠체어용 규격'을 모두 갖추고 있는 ATM은 전체 ATM의 60.3% 수준

② 장애인을 위한 '찾아가는 휴면재산 지급·조회 서비스' 제공

* 독거노인 대상 '찾아가는 휴면재산 지급·조회 서비스' 既제공('19.10 ~ 12월)

③ 장애인단체 현장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불편사항 적극 해소

* (예) 희망할 경우 텔레뱅킹 이체한도 예외적 상향(현재 회당 한도는 300~500만원 수준), 개인정보 등 관련 보안 강화, 장애로 인한 질병사고시 보험금 미지급 사유 명확화 등

② 사기 피해 및 부당 차별로 부터의 보호 강화

① 법원의 '성년후견 정보'를 금융회사에 공유함으로써 피후견인의 명의도용 대출피해 방지(→ 신정법 시행령 개정 필요)

* 성년후견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인은 독자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금융회사가 성년후견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제3자가 장애인 명의를 도용, 대출 발생

② 상품 가입시 불법·부당관행(예, 가입 거절,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등) 근절 → 가입거부 기준 구체화 등 상품가입 가이드라인 마련

③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물리적 보조장치 제공

① 청각·촉각을 통해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* 제공을 확대하고, 다양한 시각적 보조장치** 설치·제공

* 점자 신용카드, 점자 통장, 상품설명서 음성전환, 음성 OTP 성능 개선 등

** 수화서비스 제공 영상전화기 설치 확대, 문자를 통한 ATM 고장신고 등

② 신체적 불편함에 따른 금융이용제약 최소화*

* 경사로 등 휠체어 이용자 친화적 시설,

자필서명이 불가시 제한적 범위의 대리서명 허용 검토 등

라. 청년 경제자립 지원

◆ 청년의 삶과 미래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금융 구현

① 주거비·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대폭 확대

①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* 추진

* 주택금융공사·서울시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하고, 향후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시 전국으로 확대 시행 추진

② 대학생 등 구직청년의 학비·생활비 등 지원을 위해 '20년 중햇살론^{youth}를 1천억원을 신규 공급

② 청년의 금융소외 방지 및 재기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

① (신용평가)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 개발 검토

* [현재] 제도권 금융거래 이력, 부채수준 중심 → [개선] 서민금융·사회적금융 중개기관(사회연대은행 등) 상환 이력, 비금융정보(통신료 납입 등) 등도 평가요소에 반영

② (재기지원) 생계형채무 불이행으로 '저신용·저소득'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

* ①미취업청년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환 유예기간 확대 ②신용회복위원회-장학재단간 학자금 채무조정 협업 강화, ③청년 대상 금융사기 방지 등

③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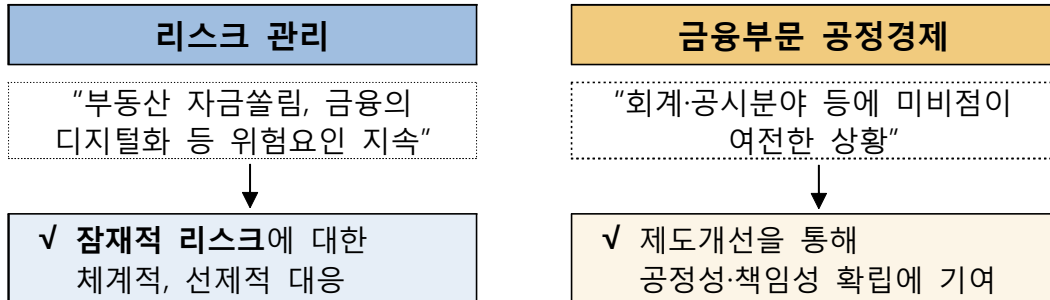
① (창업) 창업기업에 '20년중 정책자금 총 37조원을 지원

② (고용촉진)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에 '20년중 정책자금 총 7.6조원 지원('19년 대비 약 13% 확대)

-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* 도입도 병행

* 지원기관별·지원프로그램별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기준 마련, 사업효과 측정기준 개선 등

- ◆ 대내외 잠재위험요인에 대해 위험발생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,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



■ [제⑦과제] 금융리스크에 대한 체계적·선제적 대응

- 가.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
- 나. 디지털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
- 다. 금융산업 건전성 관리 강화
- 라.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

■ [제⑧과제] 금융부문의 공정성·책임성 강화

- 가. 주주권행사 내실화·공시품질 제고
- 나. 금융부문 공정경제과제 추진
- 다. 불법사금융 피해근절
- 라. 지속가능금융 기반마련

가.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

◆ 리스크 요인 및 파급효과를 정밀분석하고, 모니터링 강화, 법·제도정비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확고한 시장안정 도모

① **[리스크 점검]**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, 잠재리스크 누적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 강화

① 잠재 위험요인 식별·대응체계*의 운영 지속 및 기능 강화

* 금융유관기관 합동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·금융리스크 점검회의 등

②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불안요인에 대해 피해 기업 신속 자금지원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감시·예방 강화

③ 중국의 기업부채 문제, 중동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에 모니터링 등 점검강화 및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강구

② **[자본시장]** 금융시장의 복잡성 심화, 고수익·고위험 투자상품 증가 등에 따른 잠재적인 시장불안요소 관리 강화

① (사모펀드)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,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 도입

-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운용사 내부통제 및 수탁기관·PBS·판매사의 감시·견제 기능을 확충하고,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

-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*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

* ①만기 미스매치→ 유동성 규제, ②복층·순환 투자구조→ 순환투자 금지 및 관련 정보제공 강화, ③TRS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→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보호 강화

② (파생결합증권) 기초자산 쏠림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초자산이 다변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

* 특정지수 쏠림은 해당지수 하락시 시장변동성을 확대 → 다양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자체지수(Self Indexing) 산출 허용 등

② (차액결제거래) 거래규모 증가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여부를
예의주시하고 필요시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방안 검토

* 증권사의 헤지과정에서 특정자산의 거래량이 급증할 가능성 → 새롭게 도입한
고난도금융상품 규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, 필요시 최소 증거금제도 도입 등 검토

③ (환매조건부매매) 익일물(만기 1영업일) 위주 거래(약 94%)로 대량
차환 부담 등 시장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* 강화

* 익일물→기일물 확대유도, 현금성 자산보유(예 익일물 20% 2~3일 10% 4~6일 5%) 도입

③ [금융거래지표] 금융거래지표 산출과정 관리 강화, Libor금리
산출중단 등 금융지표 관련 주요 변화에 대응

① 「금융거래지표법」이 EU로부터 동등성 승인*을 얻을 수 있도록
EU와 협의 지속

* 한국의 법·감독체계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승인받는 것으로, 未승인시
EU금융회사의 한국 금융거래지표(CD)를 활용한 거래가 중단될 수 있음

② 국제거래에 활용되고 있는 Libor 산출중단('22년 예상)에 대비하기
위한 금융권 공동대응 지원 및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추진

나. 디지털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

◆ 금융과 IT의 융합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리스크를
체계적으로 관리·감독하여 혁신과 안정간 균형을 확보

① [금융보안] 새로운 보안위협·리스크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
혁신을 뒷받침하는 금융보안 원칙 정립

○ 단순 IT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금융회사가 전사적
관점에서 디지털 리스크를 관리하는 금융보안 거버넌스 확립

*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, IT·준법감시·감사의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 등

○ 민간에서 공공에 이르는 금융분야 합동 위기대응체계를 마련
하여 오픈뱅킹 등 금융 인프라의 위기대응 역량 고도화

② **[제3자 리스크 관리]** 금융의 디지털 전환, 산업간 융·복합 등으로 발생하는 제3자 리스크(Third Party Risk)에 대한 감독을 강화

- 클라우드 등 IT아웃소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비금융 분야에서 파급·전이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- 대형 ICT·전자상거래 기업(Big tech) 등의 금융업 연계·진출이 소비자보호·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 마련도 검토

③ **[보이스피싱]** 디지털 혁신의 이면에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 대응 강화

- **(예방)**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민간사업자(금융회사 등)의 고객 피해예방 의무수준을 높이고, 대국민 홍보도 강화*

* 대국민 접점이 많은 휴대폰 대리점, KTX, 고속터미널 등에서 집중 홍보

- **(범죄시도 차단)** 과기정통부·민간사업자(금융·통신사) 협업 및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차단 체계를 대폭 강화

-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뿐 아니라 최근에 발생하는 신종수단(악성앱·피싱사이트 등)도 신속 차단

- 빅데이터·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(FDS)을 개선함으로써 사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신속히 차단

- **(단속·처벌)**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*하고, 해외기반 보이스피싱조직 단속을 위한 국제수사 공조도 강화

* (현행) 일반사기범죄와 동일한 수준 → (개선) 주가조작 범죄 수준으로 징역형을 강화(징역 최소 1년 이상)하는 방안 등도 검토

- **(피해구제 강화)** 금융회사와 이용자간 주의의무 수준 등에 따라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 구축 방안 검토

-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, 판매채널 등도 확대(통신대리점, 은행 등)하는 방안도 검토

* 현재 피해 보장한도액 5백만원 기준, 월 보험료 300~500원 수준

다. 금융산업 건전성 관리 강화

◆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건전성 제도를 지속 개선하면서, 국내 금융산업 특성 등을 감안한 세부방안을 수립

① [은행] 은행 대출 등의 편중리스크 완화, 과도한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 방지 등을 통해 건전성 제고

①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거액익스포저 한도 규제*(바젤Ⅲ) 정식규제도입(현재 행정지도 중) 검토

* 연계된 거래상대방(통제관계 또는 경제적 의존성으로 연계되는 그룹)별 익스포저를 BIS기본자본의 25% 이내로 관리(10% 이상인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)

※ 국제 동향, 시범실시 결과, 도입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식규제 도입여부, 도입시점 및 방식을 확정

② 지자체 금고 등 입찰 과정에서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

* 출연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보수적으로 분석하여 은행과 일반이용자에 부담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출연토록 규정

② [보험] 국제회계기준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('22년)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

① 고금리 계약 보유에 따른 건전성 하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* 등 보험부채 구조조정수단 마련

* 보험계약에 내재된 위험 중 일정 부분을 재보험사로 이전하여 책임을 공유하는 형태로, 금리하락으로 인한 보험부채 증가를 재보험사와 나누어 부담

② 新지급여력제도(K-ICS)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 제도(RBC) 대비 새로 추가되는 부담에 대한 단계적 도입안을 마련하고 영향분석진행

③ [정상화·정리계획 제도 도입] 대형금융회사 부실에 따른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고, 신속·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

○ 대형 은행 등을 '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'으로 선정하고 정상화·정리계획(RRP; Recovery&Resolution Plan)을 사전에 마련

라.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

◆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시장 친화적,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, 선제적 대응을 강화

①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^① 및 운용방식 다양화^②, 구조조정 채권시장 육성^③ 등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지속·강화

※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「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TF」 운영 및 토론회 등 개최

<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(예시) >

i)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(1.6조원→2.6조원)

ii) 부채투자펀드 조성 등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식 다양화

* 회생절차 진행·종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주력산업 및 DIP금융을 지원하는 부채투자펀드 조성

iii) 구조조정 채권시장 육성을 위해 채권 적시매각을 통한 시장 안정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충 추진

* (예) ①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채권 적시매각 유도
② 다각적인 투자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조조정 채권투자 유인체계 마련
③ NPL 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

② 민간전문가, 기업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 구조조정 제도개선 종합방안 마련

※ 향후 세부 이행 계획 논의 등을 위해 법원과 상설협의체 운영 예정

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

* (예) 은행 내부 신용등급과의 연계 강화 등 기업 신용위험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,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기업 정보공유 플랫폼(기업구조혁신센터) 활성화

②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이 적시에 구조조정절차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유인체계를 정비

* (예) 워크아웃 성과평가 내실화를 위해 평가위 구성·평가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

가. 주주권행사 내실화 · 공시품질 제고

◆ 주주권 행사 내실화 및 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회계개혁 안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

① [내실있는 주주권 행사 지원]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(5%를) 개선방안을 원활히 시행하고, 의결권 자문의 질을 제고

① 5%를 개선방안*(2월 시행)의 정착을 위해 법령 해석, 공적연기금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구축확인(복지부 협업) 등을 차질없이 추진

* 주주활동의 강도에 따라 지분 보고·공시 내용 및 시기 등을 차등화

② 의결권 자문사의 전문성·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시제도* 등 검토

* 의안분석 방법론, 이해상충 방지방안, 분석 조직·인력현황 등

② [공시]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·혁신기업 등의 공시역량 강화^① 및 공시제도 개선^② 추진

① 중소·혁신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시역량 부족으로 공시의 질적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선보완(거래소, '20.上)

* 불성실 공시 제재만으로는 주의 환기만 가능하고 공시역량 확충이 어려운 한계 보완

② 투자자가 공시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보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('20.下)

* (예) 회사규모 등 특성에 맞게 공시항목 조정 중복되거나 유용성이 낮은 공시항목 재정비

③ [회계개혁 안착 지원]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(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)가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·추진

○ 회사·회계법인 부담완화 조치를 마련(예: 감사인 지정시기 단축)하고, '적발·제재'보다 '사전지도' 중심의 감독시스템 안착 유도

나. 금융부문 공정경제과제 추진

◆ 금융부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순조로운 안착,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추진

① **[금융그룹위험]** 금융그룹감독* 시범운영의 경험**(18.7월부터 모범규준 시행)을 바탕으로 금융그룹감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·추진

* 금융그룹(2개 이상 업종 영위, 非금융지주)차원의 동반부실·편중투자 위험 등 관리·감독

**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협의체 구성 등 그룹차원의 위험관리체계 마련

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화 노력을 지속하되 모범규준으로 시행가능한 과제를 추가 발굴·추진

② 금융그룹 위험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 평가방안을 개선하고 평가등급을 세분화

③ 금융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위험관련 사항* 등을 공시하게 하여 금융그룹의 위험경감 노력 등을 유도

* (예) 계열사간 출자·신용공여, 내부거래 현황, 출자구조, 임직원간 교류 등

② **[불공정·불건전거래 근절]** 검사·조사 집행체계 및 제재수단 개선방안*을 마련, 불건전 거래 발생가능성이 큰 분야** 집중 점검

* 연구용역·유관기관 TF를 통해 종합 개선방안 마련(예, 과징금형사처벌 외 제재수단 다양화 등)

** 무자본 M&A회사 회계처리, 21대 총선 테마주 불공정거래 등 9개 분야

③ **[자금세탁방지]** 가상자산·P2P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 강화

①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* 국회 통과 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마련 및 감독·검사 방안 수립

* 정무위원회 통과('19.11.26.),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

② P2P법 시행('20.8월)에 따라 P2P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

다. 불법사금융 피해근절

◆ 음성화·지능화되는 불법사금융 대응을 위해 “사전예방 - 단속·처벌 - 피해구제”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(‘20.上)

① [사전예방] 온라인 불법대출광고 차단 등 전방위적 예방체계 구축

① 온라인매체(SNS·포털)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시 광고주 불법성(예: 무등록 대부)을 확인토록하여 불법광고 유통을 사전 차단*

* 가이드라인(방통위 등 협업)을 통해 시행하고, 추후 처벌근거 등 법제화 추진

② 금감원의 「불법광고 자동적출시스템」 운영을 통해 적발확대하고, 적발건은 방통위와 협업을 통해 신속차단

* 기존 적발사례를 DB화하여 불법광고를 자동적출하고, 신종수법 지속 업데이트

③ 불법사금융 범죄수법, 법정최고금리, 서민금융 등 지원수단*에 대한 전방위 홍보로 대국민 경각심 제고·피해예방 추진

* (예) 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(햇살론¹⁷ 등 서민금융),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제도

② [단속·처벌] 단속은 늘리고, ‘적발되면 강하게 처벌’하여 범죄유인 근절

① 법정부 일제단속 및 지자체의 대부업 특사경 확대* 추진

* (예) 지정 지자체 및 수사범위 확대(대부업법 → 불법추심, 신종수법 등 추가)

② 불법영업에 따른 이득을 제한*하고, 적발시 형사처벌 강화

* (예) 상사법정이자율(6%) 초과수취분 무효화, 연체차주에 대한 증액채대출 불허 등

③ [피해구제] 정부의 피해구제 프로그램 연계제공 및 법률지원확대

① ☎1332(금감원 신고센터)로 신고하면 ‘한번에 해결되도록’ 신고 - 구제 - 서민금융·자활지원 기관간 연계* 강화

* 금감원(신고)- 법률구조공단(소송 등 법률구제) - 서민금융진흥원(자금지원·채무조정)

②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*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

*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연락가능 (공정추심법)

라. 지속가능금융 기반마련

◆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, 기후 변화 등 미래대비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, 지속가능한 금융기반 구축

1 [ESG 정보공개 확대]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정보공개를 확대

① 대형 상장사(자산 2조원 이상)의 지배구조 공시('18년말부터 의무화)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정보 표준화·명확화 등 제도 개선* 추진

* '19년 200개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→구체성이 낮은 공시, 항목별 공시수준 편차, 기업에 불리한 내용 누락·부실기재 등 개선 필요

② 상장사의 환경·사회 정보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자율공시하는 '지속가능경영 보고서'의 공시내용 표준화 및 공시 확대 추진*

* 상장사의 '지속가능경영 보고서'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(국제표준 안내, Best Practice 제시 등), 정보공개 및 책임투자 확대를 위한 상장사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

2 [기후금융] 녹색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원활히 추진하고,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및 시장기능 제고 추진

① (정책자금) 녹색산업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('20~'22년)간 총 30조원 규모의 대출·투자·보증 공급 추진

② (배출권시장) 배출권 파생상품 거래를 도입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'배출권 선물시장 개설'을 위한 선행과제 검토

3 [NGFS* 가입] 기후변화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 협의체인 NGFS 가입 등 글로벌 공조체계 강화

* 기후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美, 英, 佛 등 주요 금융당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(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)

4 [사회적 금융]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지속

○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4,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,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* 등을 지원

*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강화, 중개기관 DB 확대 등